경기도여성가족재단·한국정치사상학회 공동학술회의

디지털성범죄 제도개혁을 위한 2023년 2차 정책라운드테이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의 방향을 묻다』

"인권, 페미니즘 그리고 디지털 시민교육"

Ⅰ 행사 개요

일 시 2023. 6. 17.(토) 15:00 ~ 19:00

장 소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연희관 402호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주 관 경기도여성가족재단·한국정치사상학회 공동주관

Ⅰ 세부 계획

15:00~17:10	'130	사 회	장동진 (연세대학교)
		제1발표	"'공정' 요구와 성평등" 정인경 (전남여성가족재단)
		제1토론	이관후 (서강대학교)
		제2발표	"제3국(중국)출생 탈북청소년과 젠더화된 시민권" -우리 사회의 젠더불평등한 인식으로 인한 탈북 청소년 집단의 차등 대우- 이주연(고려대학교)
		제2토론	백미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제3발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은 얼마나 올바른가?" 이미준(성균관대학교)
		제3토론	송지우(서울대학교)
17:10~19:00	'110	플로어 종합토론 및 마무리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한국정치사상학회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의 방향을 묻다』

“인권, 페미니즘 그리고 디지털 시민교육”

□ 사　회: 장동진(연세대)

■ **제1발표**

정인경(전남여성가족재단) “‘공정’ 요구와 성평등”

■ **제1토론**

이관후(서강대)

■ **제2발표**

이주연(고려대) “제3국(중국)출생 탈북청소년과 젠더화된 시민권” - 우리 사회의 젠더불평등한 인식으로 인한 탈북 청소년 집단의 차등 대우 -

■ **제2토론**

백미연(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제3발표**

이미준(성균관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은 얼마나 올바른가?”

■ **제3토론**

송지우(서울대)

정인경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정’ 요구와 성평등”

‘공정’요구와 성평등

정인경

1. 문제제기

한 생을 대신할 만큼 빛나는 시기, 젊음·꿈·열정·패기 등의 단어와 함께 얘기되던 ‘청년’이 언제부터인지 암울함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되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식의 이 시기를 낭만화하는 말은 ‘열정 페이’처럼 청년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한다는 의심을 벗어나기 어렵다.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세대, 미래 불안을 넘어 미래를 꿈꾸지 않는 세대, 신자유주의의 세례를 받고 자라 연대의 가치가 아닌 ‘생존주의’를 체득한 세대 등의 비관적 진단이 넘쳐난다.

‘88만원 세대’를 시작으로 하는 청년에 대한 규정은 ‘헬조선’, ‘노오력’, ‘흙수저’, ‘이생망’ 같은 청년의 자조적 인식과 상호작용하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의 팍팍한 삶을 어둡게 형상화한다. 자기계발서를 탐독하고 부자 되기를 열망하는, 공동체 감각을 결여한 채 오로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젊은이들에 대한 동정과 훈계는 정글 속 각자도생의 사례가 추가될 때마다 다양한 버전으로 갱신된다.

한편, 2020년 인구가 정점을 찍으면서 국가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년정책은 인구 대응 시책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1]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청년의 자립과 정착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까지 하락하자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는 ‘MZ’세대 들여다보기와 ‘아이를 낳지 않는’ 대한민국에 대한 절망적 인식도 심화하는 것처럼 보인다.[2]

청년에 대한 탐색적 질문과 더불어 사회 분석을 세대로 치환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적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세대론은 청년기 사회화 과정에서 겪는 집단적 경험을 토대로 한 세대가 일정한 정서를 공유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최근 유행하는 ‘MZ’ 규정은 한 집단의 이질성, 특히 계급·계층의 차이를 지우며 청년 내부의 불평등을 비가시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청년 세대 담론에서 청년은 남성의 생애 과정과 열망을 기본값으로 하고 있어 성별로 분기하는 생애 경험과 욕망이 적절히 다뤄지지 않는다.[3]

다양한 청년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는 ‘젠더 갈등’이다.[4] 젠더 갈등은 2015년 ‘메갈리아’로 상징되는 ‘넷페미’의 부상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베’의 각종 혐오 발언이나 십대 청소년의 여성가족부 희화화는 온라인 하위문화 정도

---

1) 청년의 사회적 유출이 심각한 지방에서는 특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으로 일자리, 주거, 혼인·출산·보육 정책의 청년 지원책으로 양산되고 있다.

2) 청년 인구가 집중되는 대도시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낮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서울이 0.59명으로 가장 낮고, 특·광역시 평균이 0.69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다.

3) 청년 담론, 청년 정책에서 나타나는 여성 청년의 비가시화에 관한 논의로는 배은경(2015), 김수아(2021) 참조.

4) 마경희 외(2020) 참조. 젠더의 용례가 확장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성 또는 성별의 번역어를 사용하고 맥락에 따라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미 널리 쓰이는 용어를 그대로 따오거나 발화자의 표현을 살리고자 할 때에는 젠더로 표기했다.

로 인식되었고, 문제적 현상으로 간주되긴 했으나 '젠더 갈등'으로 포착되지는 않았다.[5] 1999년 '군가산점제 폐지'가 온라인 성 전쟁의 시발점이라고 해도 사회적 관심은 덜했다. 젠더 갈등이 모든 세대의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정치 쟁점은 아니었던 것이다.

청년세대 내 성 갈등이 정치적 균열을 가져올 만한 주요 사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온라인에 만연한 안티 페미니즘에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한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와 관련된다. 메갈리아의 이른바 '미러링'(혐오 표현 되돌려주기) 전략이 '남성혐오' 논란을 촉발하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젊은 여성들이 집단적 발화와 실천을 통해 정치 주체로 부상하고 또 이들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면서 그 이론적 자원인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페미니즘의 대중화'라고 할 만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김보명, 2019).

연대기적으로 보자면, 2015년 메갈리아의 탄생,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을 계기로 형성된 자유 발언대, 낙태죄 폐지 '검은 시위', 2018년 '미투 운동', '혜화역 시위'(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집회) 등 20·30대 여성의 세력화라고 할만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그에 반응하여「여성폭력방지 기본법」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같은 변화도 나타났다. 이렇게 여성의 목소리와 행동이 광장에 등장하면서 '젠더 갈등'도 커졌다.

젠더 갈등이 정치 의제화한 것은 20대 남성의 미래 불안과 '친 여성정책'에 대한 반감을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하는 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6] 이들은 우선 여타 세대와 구별되는 청년세대의 독립적 의제를 내세웠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정'이었다. 이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처방은 '공정한 경쟁'이었으며 여기에서 '젠더'는 피해갈 수 없는 주제였다. 그렇게 청년의 기수로 나선 정치인은 제1야당의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30대 당 대표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20·30대 남성의 지지를 얻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지점은 '페미니즘'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기사나 논설이 주요 일간지의 지면을 차지하고, 술자리 대화 등에서 '페미니즘'이 언급되기 시작한 페미니즘의 대중화가 페미니즘을 용도 폐기하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에 다름 아닌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패륜적이기까지 하다는 인식은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고, '페미'(페미니스트)는 부정적 낙인이 되어 색출과 응징의 대상이 되었다.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끓어오른 동시에 반감이 확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가족부와 관련 법·제도는 어쩌다가 불공정과 역차별의 상징이 되었는가? 공정 요구는 성평등의 의미를 어떻게 제한·환원하고 있는가? 이 글은 '이대남'(20대 남성) 대 '이대녀'(20대 여성) 구도로 재현되는 청년세대 젠더 갈등에서 드러나는 공정과 성평등의 의미를 살펴보고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반복되는 논쟁을 성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이 정치 의제로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 새롭게 발명되어야 할 성평등 정치가 청년세대의 생애 기획과 어떤 접점을 형성할 수 있을지 논의해볼 것이다.

2. '공정' 요구와 '젠더 갈등'

지난 몇 년 사이 청년 담론에서 공정이 핵심어로 부상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공정 사회'를 국정 가치로 천명한 것을 떠올려보면 공정이라는 화두 자체는 새롭지 않다.[7] 그 해에

---

5) 윤보라(2013) 참조.
6) 마경희 외(2019).
7) 참고로, 이명박 정부의 '공정 사회' 5대 추진방향은 1)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2)균등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최장기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에도 불공정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있었겠지만, 2017년,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전례없이 높았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서 촉발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였다.

하지만 부정부패와 불공정 혁파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오래지 않아 실망으로, 그리고 '조국 사태'를 거치며 환멸로 이어졌다. 대통령의 사과까지 나올 만큼 심각했던 '조국'을 둘러싼 '국민의 분열과 대립'은 조국 수사를 지휘한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새롭게 취임한 윤석열 정부의 취임 일성은 다름 아닌 '공정'과 '상식'이었다. 정권 교체의 핵심 구호였던 '공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양상이다.

이러한 '공정의 역습'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부터 부각되었다. 청년을 중심으로 '불공정 사회'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이 공정인가에 대한 의문과 혼란부터 야기했다. 평창겨울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가상 화폐 규제 등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실력을 보상하지 않으며, 성공의 기회를 차단한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촉발된 '공정' 논쟁은 이 시대 청년의 욕망에 주목하도록 했고 '능력주의' 논쟁도 낳았다.[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역인재 선발, 공공의대 설립 등의 사안에 청년들이 불공정을 이유로 반발하는 데 대한 분석적 논의를 종합하면, 입학·입직 단계에 있는 청년들은 높은 소득과 안정적인 일자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펙'이나 '시험 성적'으로 입증되는 개인의 성과에 대한 차등적 보상을 정당하다고 간주한다. 설령 사회의 보상 구조가 소득과 자산, 나아가 권력에서 큰 격차를 낳더라도 이러한 불평등은 개인의 능력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이므로 교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공정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공정'이 일종의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지만 숙고된 인식이나 공유된 합의 없이 필요에 따라 자기 이익을 방어하는 데 활용된다는 지적에서부터, 능력주의로 무장한 기득권층이 벌이는 반란이라는 진단이 그것이다.[9)] 공정의 외피를 입은 능력주의에 대해서도, 능력의 객관적 측정이란 애초에 불가능하며 오롯이 개인의 능력인 것은 없다는 지적, 지금의 능력주의는 현 체제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신화일 뿐이라는 비판, 그리고 능력의 존중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격차를 유발하는 보상 체계가 문제라는 인식까지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었다.[10)]

그런데 공정의 이름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가 청년에게 고유한 사고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시장과 국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진보와 보수의 구별에 따르면, 현재의 상태를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구조로 전제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는 것은 보수의 생각이다. 자유 시장을 기본 구조로 하는 사회에서 불평등은 개인의 부정적인 성향과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일 뿐이라는 보수의 사고가 청년의 공정 감각, '룰'에 대한 집착과 공명하는 것이다.

물론 입시·학력에 민감하고 성공 서사에 열광하며 노골적인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능력주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3)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4)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5)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이며, 8개 중점과제는 1)공정한 병역 의무, 2)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3)교육희망사다리 구축, 4)체불임금 해소, 산업 안전 등 근로자 권익보호, 5)공정 공직인사, 6)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7)전관예우성 관행개선, 8)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었다.

8) 천관율, '문재인 정부를 흔든 '공정의 역습', <시사IN>(2018. 3. 5.)

9) 전혜원, '공정은 어떻게 그들의 무기가 되었나', <시사IN> 대담(2020. 9. 28.), 김정희원(2022) 참조.

10) 박권일(2021), 엄혜진(2021), 박명림, 신광영, 윤평중, 이진우(2021) 참조.

의’ 신화가 청년 남성에게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 여성의 욕망도 일종의 시대 정신인 공정 감각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다만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청년 여성의 목소리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남성에게 빼앗긴 여성의 몫을 되찾는’ 분투와 결합한다는 것, 그리고 주로 소비 역량과 행위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군 장병 대상 이벤트에 대한 문제제기, 페미니스트 물품 구매, ‘여성혐오’ 콘텐츠 보이콧, 여성 서사 밀어주기 등의 온라인 페미니즘 행동주의가 대표적이다(홍보람, 2021; 엄혜진, 2021).

자기표현과 행위성을 소비로 드러내며 이를 페미니스트 정체성과 결부시키는 현상에서 확인되는 바는 개인 또는 집단의 몫 챙기기가 ‘평등한 자유’의 추구로서 권리 담론을 대체한다는 점이다.[11] 이른바 ‘돈이 되는 페미니즘’은 페미니즘과 결합한 마켓팅 전략에서 파생한 말로, 현재는 사적·공적 활동을 아우르는 여성 주체성의 표현이 되었다. 능동적인 자기 관리를 통한 계층사다리 오르기와 구매력의 과시, 서로를 격려하는 ‘정상에서 만나자’는 다짐이 페미니스트 실천이 된 것이야말로 ‘페미니즘 대중화’의 생생한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엄혜진, 2021).

페미니스트 실천으로 명명되긴 하지만, 개인의 역량 강화에 몰두하며 ‘응분의 몫’을 쟁취하려는 청년 여성의 공정 감각에서도 사회구조에 대한 착목이나 보편적인 권리의 진전을 통한 불평등의 해소 같은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다.[12] 개인의 역량은 사회적 관계와 제도에 의존한다는 구조적 인식 대신, ‘파이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에 집중하는 경향의 극단화는 ‘생물학적 여성’ 우선의 트랜스젠더 혐오, 난민 반대 등으로 표출되었다(홍보람, 2021; 허성학, 2021).[13]

이처럼 ‘공정’이 제한된 기회와 자원을 둘러싼 개별 경쟁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성 간 대립이 첨예하게 전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20대의 서사에서 남성의 성공과 여성의 성공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표상되는데, 다른 연령 집단과 달리 유독 20대가 성 갈등을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평등’이 제한된 기회와 자원 배분 문제로 축소되는 것이다. ‘20대 남성’이 공정을 요구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14]

성과 연령을 기준으로 한 집단 구분에서 ‘20대 남성’이 부각된 시기는 2018년 말이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유독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최종숙, 2020; 허성학, 2020).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의 부정 평가 요인으로 ‘젠더 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은 주요 언론 보도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했는데, 이는 결국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정부의 불공정·역차별 정책’이 20대 남성의 반발을 키웠다는 진단이었다.[15]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자문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의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요인

---

11) ‘야망’과 ‘파이’를 핵심어로 하는 온라인 급진 페미니즘의 인식은 『나는 내 파이를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 자기 몫을 되찾고 싶은 여성들을 위한 야망 에세이』라는 책 제목에서 잘 드러난다.

12) 페미니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 서사의 핵심 구조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 자기계발에 힘쓰는 등 주체적인 삶을 기획하게 되었다는 것이다(홍보람, 2021).

13) 워마드를 위시한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는 ‘여성만 챙긴다’는 노선을 명시하며 페미니즘을 여성만을 위한 여성의 실천으로 배타적으로 정의하고 분리주의적 실천을 강화했는데 이것이 광장으로 나온 사례가 바로 2018년 ‘불편한 용기’가 주최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집회’(일명 혜화역 시위)이다.

14) 20대 남성은 성평등에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성평등을 지지한다.

15) KBS, [취재-K] “문 대통령 지지율, 유독 ‘20대 男’이 등 돌렸다? 그래프 겹쳐보니”(2018. 12. 17.), [월간중앙], “20대 남성에게 듣는 반문 정서의 속살”(2019. 1. 20.).

분석 및 대응방안」(2019. 2. 18.) 문건도 대체로 비슷한 주장을 담았다. “개인주의와 페미니즘의 가치로 무장한 집단이기주의 감성의 진보 집단”의 ‘20대 여성’과 달리 ‘20대 남성’은 “경제적 생존권과 실리주의를 우선시하면서 정치적 유동성이 강한 실용주의 집단으로 변화”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라면, 결론은 ‘문재인 정부 성평등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페미니즘 편향적 교육내용 점검’이나 ‘할당제 등으로 역차별 당하는 남성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16]

비슷한 시기에 『시사IN』과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안티 페미’로 표출되는 20대 남성의 불만 지점을 구체화했다. 20대 남성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남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절반 이상은 결혼문화가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고 페미니즘을 여성우월주의로 보는 시각도 매우 강했다. 법 집행이 남성에게 불리하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한 마디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차별받는다’는 피해의식이 강했고 이를 ‘불공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17]

20대 남성이 페미니즘을 남성 차별적 권력으로 인식하거나 스스로를 차별받는 피해자로 규정하게 된 일련의 사건과 ‘피해 경험’에 주목하며, 이를 ‘공정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결집시키는 데 성공한 것은 보수정당이었다. 2019년 6월에 발간된 이준석의 책 제목이 『공정한 경쟁』인 것은 시사적이다. 「젊은 세대가 바라는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서문 격의 글에서 그는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와 구별되는 젊은 세대의 독립적인 의제로 공정을 제시한다.

또,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담론 중 하나로 ‘젠더 갈등’을 지목하며 기성세대가 만든 가부장적 질서가 낳은 불평등의 보상 청구서가 20·30세대 남성에게 날아오고 있다고 주장한다(이준석, 2019). 그렇게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젊은 남성을 대변하듯, 책의 첫 장은 ‘젠더’에 할애된다. 여기에서 그는 여성이 출산의 굴레를 벗어나고 육아에서 해방되어 일을 통해 자기를 실현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여성운동이나 사회제도가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라 피임 기술의 도입, 기계화와 같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남녀의 차이를 제도적으로 보정’하려는 시도는 별 소용이 없다. 할당제 같은 제도나 여성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으며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이 ‘젠더’에 관한 그의 명확한 입장이다.[18] 나아가 그는 여성할당제는 잘못된 정책이며 토론 배틀이나 정책공모전이 여성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도 언급하는데, 그 바탕에는 구조적인 차별이나 격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의 성취는 공정한 경쟁으

16) 임시방편적 처방으로 내놓은 결론을 보면 성평등과 페미니즘의 구별이 눈에 띈다.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전자는 추구해야 할 것인 반면, 후자는 편향된 것 또는 역차별을 낳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청년 집단에 대한 진단도 수긍하기 어렵다. 특히 오늘 청년이 처한 현실과 맞물린 주체성에 관한 논의를 보면 개인 단위의 생존 서사가 남성만의 것이 아니다. 또 여성의 경험과 인식에서 ‘생존주의’는 말 그대로 생존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측면이 있는데 ‘성폭력’이 급진 페미니즘의 핵심 사안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17) 천관율,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시사IN』(2019. 4.15.), 『20대 남자, ‘남성 마이너리티’ 자의식의 탄생』 참조. 이러한 논의에 대해 특정 집단의 목소리를 과잉대표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보면 20대 남성은 다른 연령 집단 남성에 비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약하고 전통적 남성성도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인지율이 낮고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도 사실이므로 성평등과 관련한 성, 연령별 인식 격차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8) 인터뷰 형식을 취한 이준석의 주장은 쉽고 간결하여 호소력이 있다. 그러나 복잡한 사안을 ‘일도양단’하듯 쳐내는 그의 답변 대부분이 역사와 논리를 통해 반박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그의 입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집합적 운동이나 제도의 변화를 통해 여성의 삶이 진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보수의 논리이다.

로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또, 이준석은 젠더 갈등의 핵심 사안인 '군대' 문제도 정면으로 다룬다. 그가 보기에 군 가산점제 도입은 젠더 문제가 아니다. 보훈 또는 군 경력 우대정책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여성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는 것이 문제이므로 여성에게 사병 복무의 기회를 열어준다면 군 가산점제는 남성 지원정책이 아니라 군에 대한 지원정책이 되어 '비젠더 문제'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 논리이다. 덧붙여 그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여성 사병 지원제를 먼저 도입한 후 2년 정도 지나 이들이 제대할 시기에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이렇게 정치 의제가 된 '젠더 갈등'은 결국 성 간에 기회와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문제로 접근되고 그 배경이 되는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자체를 봉쇄한다. 20대 남성의 분노와 억울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성평등을 '공정'의 문제로 환원하는 경향을 강화한다. '청년'의 고단하고 팍팍한 삶, 여성가족부로 상징되는 성평등의 제도화, 군대라는 세 가지로 20대 남성을 대변하고자 했던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노동시장 불안, 여성에게 유리한 정책, 남성만의 희생이라는 서사는 서로를 강화하며 여성에 대한 적대감 또는 여성만을 우대하는 불공정 사회에 대한 원한과 분노의 감정을 부채질한다.[19] 여기에 종종 기성 세대와 노조에 대한 공격도 더해지는데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40·50대와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의 기득권층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2022년 초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SNS 계정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남긴 것은 젠더 갈등의 정치 의제화, 즉 이준석이 청년 정치의 기수가 되어 20·30대 남성의 보수정당 지지를 주도한 과정의 산물이자 '586 기득권 정당'을 공략하는 세대포위론의 하나로 봐야 할 것이다. 또, 이준석이 던진 "기회 불평등의 결과로 약자인가? 경쟁의 결과로 약자인가?"라는 질문은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의 의미를 짐작케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나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 역설, '백래쉬' 정치에 대한 성토만으로는 '젠더 갈등'으로 짜여진 '누가 더 피해를 보는 집단인가'의 논의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성별 관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성장했고 또 그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이 문제가 되는 한에서,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논의는 핵심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성평등에 대한 반발이 문제라기보다는 성평등의 의미 자체가 집합적 실천을 통한 사회 변형의 가능성을 봉쇄당한 현존 체제의 기회와 자원 배분의 문제로 축소된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3.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정책의 후퇴?

공정이라는 화두가 전혀 새롭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 폐지도 대선 시기마다 불거져 나온 주장이었다. 그것을 공정과 관련짓는 논리 구조마저 유사하다.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은 여성가족부 통폐합을 제안했는데 당시 이명박 당선인은 "여성부는 여성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고 했다.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의 즉각적인 반발과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반대로 부서 폐지가 아닌 축소가 결정되었고 2년 후 원상회복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이후 14년이 흘러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평가와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다시 등장했다.[20] 사실 '여성가족부 폐지'도 해묵은 주장이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정책의

19) 정인경(2016) 참조.

20)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빠지면서 관련 논의는 다시

후퇴'라며 반발하는 여성계의 주장에도 기시감이 드는 건 마찬가지다(김은희 2022). 지난 10여 년 동안 여성가족부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는 더 심화되었고, 청년 세대 젠더 갈등의 이름으로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반감이 더 커졌으며, '페미니즘'은 시대착오적인 이념 내지는 여성우월주의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여성계의 부처 존치 및 강화 주장은 일종의 세를 과시하는 압박 이상이 될 수 없다.[21]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개최된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된 글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의 근거들이 단편적 사실의 짜깁기이거나 가짜 뉴스에 기초한 것이며, 성평등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독립된 정부 부처로서 여성가족부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증하는 데 주력한다.[22]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이 젠더 갈등을 정치 의제화하며 부상한 정략적 공세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학계의 논의는 국가기구의 확대·강화 주장을 넘어서는 페미니즘 의제 전반에 대한 성찰을 담아야 할 것이다.

사실, 대선 시기마다 불거진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과 별도로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 개편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부처 명칭에 '여성'이 들어가서 야기되는 불필요한 오해와 반발을 해소하고 관장 사무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에서 '성평등'을 부처 이름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10여 년 이상 추진되었지만 형식화된 운영으로 반발만 키우고 있는 성 주류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었다(박선영 외, 2021).

그러나 여성 인권의 후퇴를 막고 '성평등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 그 이상이 필요하다.[23]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운위되는 상황에서 자기 성찰이나 내부 비판은 한가로운 일이라는 인식부터 넘어서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정책의 후퇴'라는 주장에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성찰과 평가가 들어설 여지가 없으며, 오히려 특정 정권의 명운과 사회운동의 과제를 동일시하면서 양당의 적대적 공존의 자장 안에 성평등 의제를 가둘 뿐이다.

먼저, 권력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할 운동단체나 연구자가 특정 부처의 존치를 요구하는 상황 자체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대목일지도 모른다. 여성운동의 '제도화'를 둘러싼 비판적 논의는 이제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지만, 2000년대 초만 해도 여성운동단체 대표자들의 정계 진출이 운동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제도화와 여성운동의 자율성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또, 17대 총선에서 '정당 불문 여성 지지'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여성정책'이 쟁점이 되지 못하는 '여성정치'에 대한 회의와 함께 '여성 정치세력화'와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24]

수그러든 상태이다.

21)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를 망라한 여성계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및 성평등정책 전담부처 강화 촉구 기자회견 등을 열며 공동행동에 나섰다.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서명, 토론회 개최, 집회 개최 등 전국적인 행동은 2008년에도 동일하게 진행된 바 있다.

22) 강이수·신경아(2022), 정현백(2022).

23) 위 연구에 담긴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보면, 2001년 여성부 설치 성과와 현재 여성가족부의 직제 개편 필요성 두 가지 항목에만 전문가 의견이 일치했을 뿐, 나머지 여성가족부 20년의 변화와 관련된 모든 항목에서 평가가 엇갈렸다(박선영 외, 2021).

24) 2003년 '총선여성연대'가 결성되어 활동한 이후 개최된 '17대 총선과 여성운동 대응활동에 대한 평가토론회'가 대표적이다. 당시 논쟁은 세대 간 대립으로 재현된 측면이 있는데 이른바 '영페미'가 주축이 된 <일다>가 비판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여성연합 총선대응방식에 비판 쏟아져', <일다>, 2004. 5. 31; '여성정치세력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일다>, 2004. 7. 21). 이후 전개된 '끼어들기'냐 '새판짜기'냐 구도의 여성 정치세력화 논쟁의 핵심은 그것이 남성 중심의 정치판과 각 정당의 성차별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가였다.

여성운동이 국가기구에 참여하여 페미니즘을 제도화한 이른바 '국가페미니즘'의 진전 이후에는 논의의 초점이 이동했다(김경희, 2009). 여성운동 지도자의 정계 진출 및 장관 임명을 전제로 한 성평등 정책 추진이 페미니즘의 주요 전략이 되었기 때문이다.[25] 특히 성주류화 전략의 채택 이후로 성평등 의제가 국가정책에 통합되는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는데 1995년「여성발전기본법」제정과「여성발전정책 기본계획」수립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과정은 소위 '민주-진보' 정부 하에서 더욱 가속화되었고, 2001년 여성부의 신설 이후 성평등 정치는 이 부처의 힘을 키우는 일과 동일시되었다.

그러나 국가페미니즘의 안착, 즉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이 행정부와 의회에 진출하여 정책 형성 및 결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평가받는 시점에 '여성' 의제는 '가족' 의제로 중심을 이동하여, 2005년 이후에는 보육과 가족업무가 여성가족부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김경희, 2009). 노무현 정부 시절 여성부가 영유아 보육 업무와 가족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개편될 때 부처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독립 부처로 생존하기 위해 보육 업무를 중심으로 덩치를 키운 것이다(박선영 외, 2021).

당시는 이혼율의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가구 규모 축소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건강 가족'과 보육이 국정과제로 부상하던 시기였다.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존립 위기' 앞에서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한 주무부처가 가족의 해체를 막고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여성인력의 활용'으로 노동력의 부족에 대처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된 상황은 성평등 목표의 희석화라는 비판과 함께 여성운동이 정부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선택적으로 포섭될 위험을 드러냈다.[26]

법제화 운동을 통해 성평등의 의제들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것이 신자유주의를 역전시키는 흐름과는 무관했기 때문에 여성 노동의 주변화와 빈곤 문제는 방치되었다는 평가는 더 통렬하다(김경희, 2009). 이는 오늘 성별 격차의 지속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에서 여전히 확인되는 바인데, 20년째 제자리를 맴도는 경제활동참가율, 연령별 고용률 그래프의 모양(M-curve)에서 확인되는 경력단절,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으로 대표되는 돌봄 직종의 여성 집중 현상 등이 그것이다. 여성의 경력단절과 중·고령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성별직종분리 등이 중첩적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물인 성별 임금격차는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27]

이러한 여성 노동권의 악화는 여성 내부의 불평등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가 추진해온 대표성 증진 등의 정책이 일부 여성에게만 해택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성평등 정책이 여성을 우대하고 남성을 차별한다는 인식도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여성가족부는 군가산점제 폐지 이후 형성된 논쟁 구도에 적극적으로 개입·대응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인식의 강화에 일조했다. 2002년에 도입한 '양

25)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에서 천명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정책 과정 전반에 젠더 관점을 도입하는 것으로 국가(행정) 부문의 개혁 전략에 다름아니다. 상세한 논의는 정인경(2012) 참조.

26) 이와 동시에 여성운동단체들이 정책사업의 대행기관이 되거나 민간보조금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서 양자의 관계에서 변화가 나타났다(신상숙, 2011). 이것이 협력적인가 갈등적인가 또는 포섭인가 배제인가에는 대개 정권의 성격에 좌우되었다. 결국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의 성격이나 지원금의 규모와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으며 이는 어김없이 '혈세 낭비'냐 '시민사회단체 줄세우기'냐의 대결로 나타나고 있다.

27) 이 점에서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는 여성가족부 존치의 핵심적인 근거라기보다는 무용론에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성평등채용목표제'가 그 대표적 사례인데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자 정책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봉합하면서 성차별 관행과 그것의 누적된 결과물로서 현 상태를 교정한다는 취지의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물고 나아가 '양성평등'을 남녀 간의 50대 50의 자원 배분으로 의미화했기 때문이다(유정미, 2020).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위한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부처의 폐지가 거론될 때마다 확인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부처의 예산과 권한이 미약하다는 것이며, 그나마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성평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가족 지원·잔여적 보육 서비스 제공·청소년 복지 관련 업무라는 사실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소관 업무가 다른 부처와 유사·중복이므로 독립 부처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여기에서 기인한다.[28]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성없는 독립 부처의 생존과 외형적 확대 추구는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페미니즘이 사실상 페미니즘의 사회 변형의 잠재력을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젠더 갈등에 적절히 개입하지 못한 데에는 '성평등'에 대한 공유된 인식의 창출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 성평등을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존재한 20여 년 동안 '성평등'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왜곡·굴절·변용되는 과정을 거쳤다.

애초에 성평등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된 법률 명칭이 '여성발전'이었다는 사실은 사회운동의 의제가 국가 부문에 수용되는 과정이 순탄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국회 속기록 등을 보면 '남녀평등'의 '평등'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여성발전'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문법적으로 이상할 뿐만 아니라 취약하고 열등한 지위에 놓인 여성에 대한 시혜적 관점이 녹아 있다(유정미, 2019).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 만에 전면 개정될 당시 새로운 법의 명칭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도 성평등 정치의 난맥상을 보여주기는 마찬가지였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되어 영어로는 동일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단어를 두고 불모의 논쟁을 벌였을 뿐, 정작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의 변화에 담겨야 할 내용이 논의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입법목적으로서 양성평등에 관한 공통의 인식 지반을 형성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청년 세대 내 성 갈등과 세대 간 인식 격차가 심화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존치 여부와 명칭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책 현장의 혼란도 여전한데 여성의 삶과 성별 관계가 급속하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시혜적 관점에서 여성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성평등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서 존중하고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성평등 정책은 자리잡지 못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산업·금융·개발 등의 정책 방향이나 내용은 건드리지 못한 채 대상별 복지 제공 성격의 사업 수혜자의 성비를 맞추는 것으로 축소되어 50대 50의 기계적 성비 균형 달성이 성평등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강화했다. 성인지 예산 또한 기계적·수치적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서를 검토했을 뿐 재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반감이 확산된 것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의 제도화가 빚은 착시일지도 모른다.

---

28) 광역이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무부서에서는 권한이 미약한 부처에서 업무를 추진하기보다는 차라리 예산과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29) 성주류화와 행정가(장관), 정치인(의원), 연구자·활동가의 삼각 동맹을 구상으로 한 젠더 거버넌스의 실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는 마경희(2007), 김경희(2009), 신상숙(2011), 정인경(2013) 참조.

가장 최근에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상황에서 여성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여성운동 이력을 지닌 국회의원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 사안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이 여성가족부 무용론이나 폐지론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정파 구도에 갇힌 '내로남불'식 처신으로는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해체 요구와 해명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나영, 2021).[30]

4. '청년'의 생애 전망과 성평등의 의미 구성

여성운동의 제도화로 인한 탈정치화의 효과는 여성해방의 이념이자 실천으로서 페미니즘이 국가 부문의 성평등 정책으로 제한·축소되고 '성평등'의 의미마저 형애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진단이다. '누가 더 피해를 보는 집단인가'로 재현되는 청년 세대 젠더 갈등이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을 갖고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한 경쟁과 대립에서 몫을 '공정하게' 나누는 문제로 현상하는 것은 성평등에 대한 공유된 인식 창출 실패의 증후일 것이다.

'20대 남성'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두고 아버지 세대가 누리던 가부장적 특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기회가 부족해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이자 '원한'의 정서라고 해석하는 것은 일면적이며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 보수와의 동맹을 강화할 수도 있다. 나아가 특정 집단을 안티 페미니스트로 규정하는 것이 페미니스트 정치의 쇄신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0대 남성'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청년 세대 젠더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없는 것처럼, '20대 여성'을 성차별 구조의 희생자 내지는 피해자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도 명백한 오인이며 '젠더 갈등'의 판 자체를 바꾸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성의 경합으로 사회적 연대가 확장되지는 않는다(홍보람, 2021). 20·30대 여성이 지지하거나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페미니즘은 때로는 자기 이익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수용된 '내 몫 찾기'라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실 온라인 급진 페미니즘에서 보이는 문화적 실천과 행위성이 각자도생의 생존 전략에 머물며 사회적 연대의 확장이 아닌 배제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을 페미니즘으로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피해와 억압을 부각하는 데 비해 사회적 불평등의 다층적 차원을 무시하고, 다른 집단에 대한 배제와 혐오의 감정을 드러낸다면 더더욱 그러하다(허성학, 2021).[31]

'특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 몫 지키기에 열중하는 것이 성별 구분 없는 청년의 공정 감각이라면, 집합적인 사회 변형을 상상하지 못한 채 모든 문제를 개별화하는 것이 세대적 특징이라면 그것은 사회 구조의 산물일 뿐이다. 사회 구조의 변혁에 필요한 것은 약자 또는 피해를 호소하며 그에 대한 보상 또는 처벌을 요구하는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평등한 자유의 진전을 위해 타자와의 연대를 확장하고 내집단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강화할 수 있는 성평등 정치의 발명이다. 시민 역량으로서 성평등에 대한 공유된 인식 기반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정치

30)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는 '대통령직속 성평등 위원회 설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김은희, 2022). 이를 염두에 둔 '여성가족부 재편 또는 강화 논의가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기자의 질문에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예산과 지원을 강화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응답하며 부처의 확대 개편을 주장했다. "여가부 없애려는 한국 보수, 자기개혁 실패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 <한겨레>(2022. 3. 8.)

31) 한 성에 대한 다른 성의 지배와 특권을 폐지하려는 이념과 운동의 이름이 생물학적 여성을 우선시하는 경향('TERF')과 차별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성이 필요하다.

와 이를 통한 공적 자원의 배분 및 사회 관계의 변형이 필요하다.

청년 세대 생애 전망 연구에 따르면 남성만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성도 '취업'을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하며, 취업 이후에도 경제적 독립과 자산 형성에 큰 관심을 보인다(김은지 외, 2020). 이러한 일 중심의 생애 구상이라는 점에서 남녀가 구별되지 않지만 친밀성의 관계나 가족의 구성에 대한 열망은 다르게 나타나며, 연애와 결혼에서의 20대 남성의 피해 서사는 친밀성이 열망과 동시에 원한이 서리는 영역임을 보여준다.

이는 결혼과 출산 규범으로 표준화된 생애 과업이 남성생계부양과 여성가사·양육의 성별 분업에 기초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노동시장 불안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별 분업에 기초한 근대 핵가족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념을 좇는 경향은 남성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때문에 청년의 표준화된 생애 모델에서의 이탈이 남성에게는 '좌절'로 여성에게는 기회 또는 '선택'으로 분기한다(배은경, 2015).

여성은 어머니 세대와 달리 결혼·가족생활을 취업과 경력 추구보다 우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 규범이 자신의 생애 구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민감하게 인식한다(김은지 외, 2020).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사회조사 등에서 나타나는 결혼·출산 인식의 성별 차이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친밀성 관계의 주도권을 여성이 쥐고 있음을 보여준다.[32] 한마디로 남성은 결혼과 출산의 비용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여성은 결혼과 출산에 따르는 기회비용에 대한 불만이 크다. 저출산의 근인인 만혼과 비혼의 확산에 이러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면 유연하고 포용적인 관계로 '가족'을 변형하는 정치가 대안으로 보인다.

'여성폭력'에 있어서도 정치의 발명이 필요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재현되는 폭력 피해의 개별화는 성적 폭력을 낳는 구조적 요인을 다루지 못한다. 남성은 무고로 인한 피해를 두려워하며 여성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일상을 두려워하지만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은 공통적이다. 정치가 실종된 자리에서 법의 적용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는 성별 갈등은 모두에게 해로울 뿐이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서의 공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폭력의 감축이며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형법이 아니라 여성의 성·재생산 자율성 증진하는 정치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에 기반한 누구나 돌보고 돌봄을 받는 사회로의 전환도 성평등 정치의 의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인간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에서 기인하는 돌봄은 생존에서부터 일상의 재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지만 가족 내 돌봄은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 및 취약성의 원천이 되며, 성별분업과 성역할 기대는 유급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져왔다. 이러한 '돌봄 불이익'에 가장 민감한 집단이 바로 청년 여성인데, 일 중심의 생애 구상과 성취 열망이 자칫 돌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그 이익을 무상으로 전유한다면 이는 기존의 불의의 구조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적으로 드러낸 것처럼 개인의 일상과 사회적 안전은 경제가 작동하는 기본 조건이며, 이러한 조건은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급·유급 돌봄노동 덕분에 유지되고 있던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표현되는 고립이 생존의 방편이 되었던 위기의 시기에 역설적으로 발견된 돌봄 가치는 코로나19 이후의 정치가 반드시 새겨야 할 교훈일 것이다.

---

32)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로 남성의 절반 가까이는 '경제적 비용 부담'을 꼽은 반면 여성은 '굳이 해야할 이유가 없어서'와 '자유로운 삶 추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자녀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항목은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음' 응답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두 배 많았다(여성가족부, 2021).

참고문헌

김경희(2009).「신자유주의와 국가페미니즘」.『진보평론』. 40호.

김보명(2018).「페미니즘의 재부상, 그 경로와 특징들」.『경제와 사회』. 118호.

김보명(2019).「젠더갈등과 반페미니즘의 문법」.『비교문화연구』. 56권.

김수아(2021).「청년정책과 청년 담론: 젠더 관점의 고찰」,『이화젠더법학』 제13권 제2호.

김정희원(2022).『공정 이후의 세계』. 창비.

김은지 외(2020).『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Ⅰ):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나영(2021).「여성가족부, 해체 요구와 해명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황해문화』 112호.

마경희(2007).「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 대한 비판적 성찰.『한국여성학』. 23권 1호.

마경희 외(2020).『청년관점의 '젠더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권일(2021).「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시민과 세계』. 제38호.

박명림, 신광영, 윤평중, 이진우(2021),「공정의 문제와 능력주의」.『철학과 현실』.

박선영 외(2021).『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X):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은경(2015).「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젠더와 문화』.

신상숙(2011).「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거버넌스: 국가기구의 제도적 선택성과 여성운동」.『페미니즘 연구』.

엄혜진(2021).「성차별은 어떻게 '공정'이 되는가? : 페미니즘의 능력주의 비판 기획」.『경제와 사회』. 132호.

여성가족부(2021).『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유정미(2019).「반격의 "양성평등"에서 "(양)성평등"의 재정립으로」.『한국여성학』. 35권 2호.

윤보라(2013).「일베와 여성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진보평론』.

정인경(2012).「젠더 주류화와 여성의 시민권」.『한국정치학회보』.

정인경(2013).「신자유주의 시대 젠더거버넌스」.『국제정치논총』.

정인경(2016).「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페미니즘 연구』.

정현백(2022).「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그 사회적 의미」.『여성과 역사』.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2019).「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최종숙(2020).「'20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경제와사회』. 125호.

허성학(2020),「'20대 남자 현상'이 던지는 질문: 청년세대의 계급적 조건을 담론화하지 못하는 정체성 정치에 대하여」.『진보평론』. 85호.

홍보람(2021),「공정으로서의 파이론? : 페미니스트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여/성이론』, 45.

이주연(고려대)

“제3국(중국)출생 탈북청소년과 젠더화된 시민권”

- 우리 사회의 젠더불평등한 인식으로 인한 탈북 청소년 집단의 차등 대우 -

Gendered Citizenship in South Korea: Third-Country-Born North Korean children as Anomalous Citizens

예외적 시민: 제3국(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젠더화된 시민권

이주연 (고려대학교 다양성연구소)

Abstract

이주와 시민권의 젠더화에 대한 이론들은 이주의 양상과 시민권의 부여 방식 및 내용이 젠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지적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주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젠더화되어 있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주민의 하나인 북한이탈주민의 시민권 역시 젠더 불평등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출생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범주에 속하지만, 제3국(중국) 출생 자녀의 경우는 이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집단 모두 한국 국적의 취득은 가능하지만, 그 하위 범주라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위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젠더 불평등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합니다. 부계 혈통 중심의 국적 부여는 폐지되었지만, 탈북 청소년의 탈북자 지위는 시민권에 대한 젠더 불평등한 사고가 반영되어 출생지(아버지의 국적/민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은 북한 출생 청소년과 달리 탈북자에게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현재는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경제적 혜택은 받지만, 여전히 탈북자 지위에서는 배제됩니다. 제3국 출생 청소년을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 논의의 분석을 통해, 두 집단을 다르게 대우하는 여러 이유 중 민족과 결부된 젠더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This study examines gendered migration and citizenship in South Korea through the case of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born in a third country. Why are North Korean children born in a third country (mostly China) treated differently from those born in North Korea (children of the same North Korean mother)?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laws, policies, and official discourse concerning North Korean defectors, this article explores the reasons for excluding "third-country-born North Korean children" from the legal category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veals that their exclusion is based on nationality, ethnicity, and androcentric views.

I. Introduction

Third-country-born North Korean children are those born in a third country to one North Korean parent (usually the mother) during extended stay in a country other than North Korea before

entering South Korea. Third-country-born children are the family member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can acquire South Korean citizenship just like North Korea-born children and are even more in number. Since 2015, the number of third-country-born children (50.5%) has outnumbered that of North Korea-born children; they accounted for 69.2% as of April 2022 (KEDI, n.d.). According to the 2016 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Korea Hana Foundation; NKRF) survey on North Korean children and youth (aged 6–16 years), 96.7% of third-country-born children were born in China (NKRF 2016, 237). However, they are treated differently. They still remain excluded from the legal category and are an anomalous group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This article attempts to answer why TCBNKC are excluded despite having a similar background to North Korea-born children and shows that the North Korean defector policy institutionalized racism/ethnicism and sexism.

II. Theoretical Background

III. The Legal Status of TCBNKC

North Koreans are generally recognized as South Korean nationals in the applications of related laws and in court decisions and obtain South Korean citizenship when they actually enter South Korean territory unless they hold the citizenship of another country.

However, not all North Korean settlers are covered by the current law, and "unprotected youths" are even excluded from the law. In this article, I examine how South Korean citizenship is given to North Korean defectors and how Third-country-born North Korean children (TCBNKC) are excluded in that process.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s (whether they are nationals of South Korea or foreigners) is not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or in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Law, but is subjec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ated law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reats all North Koreans as citizens, not refugee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tus of North Korea in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and people residing in North Korea are the people of the ROK in principle. Therefore, North Koreans, unlike foreigners, can acquire South Korean nationality without naturalization.

Although there is no clear legal provision addressing the status of North Koreans in the South as South Korean nationals, the Settlement Support Act (enacted on January 13, 1997, Ministry of Unification) provided legal ground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be legally recognized as South Korean citizens and receive official support. Third-country-born North Korean children (TCBNKC) are excluded from the legal category of 'North Korean defectors' under this law. They did not receive official support until 2017 and are still not eligible for certain benefits such as educational and medical support.

TCBNKC can be included within the legal status definition of "“South Korean citizens," but not of "North Korean defectors," which constitute a sub-category of “citizen.”

According to the Nationality Law (Article 2), the legal definition of a South Korean national follows the jus sanguinis rule.

The defini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is provided in the Settlement Support Act (Article 2) as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to mean “persons who have their residence,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spouses, workplaces, etc., in the area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e., North Korea], and who have not acquired any foreign nationality after escaping from North Korea.” Only those who have North Korean citizenship and their children born in North Korea satisfy this category and are eligible for financial aid. TCBNKC have no proof of residence, address, or family in North Korea because they were not born there.

IV. Reasons for Exclusion from the 'North Korean Defector' Category

This new group emerged when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entering the South increased dramatically and the number of people entering through third countries also increased.

Until 1998, there were only 947 North Korean defectors in all. In the early 2000s, the number of people entering South Korea increased to over 2,000 people a year and recently (before covid-19) about 1,000 people enter the country annually. As of December 3, 2023, a total of 33,916 North Korean defectors entered South 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n.d.).

Why were they excluded from the scop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first place?

First, when the Act was enacted in 1997, most North Korean defectors were only a handful of male adults, and only a few children entered South Korea. No children among these groups were born outside North Korea. Thus, policymakers did not expect to have to deal with these children and adults as the main target beneficiaries of the Act. Terms such as "child" or "adolescent" did not appear in this law until around 2009, after the number of children increased significantly and as policies specific to children (e.g., educational support) were absent.

Hanawon's programs were mainly for adults, and programs by age group began in around 2010 (Ministry of Unification 2010, p. 23). However, even afte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policies addressing them were delayed under the expectation that they would "naturally assimilate" (Chung, Choi, and Choi 2012, 4). As migrant children grew up specific policies for migrant children emerged in keeping with their life cycle.

North Korean defectors are now entering South Korea as whole families including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The ratio of women was only 7.6% in 1995, but the number of women surpassed that of men for the first time in 2002.

Almost 90% of North Korean defectors cross over to China, then to third countries (mostly Thailand) and eventually end up in South Korea and the time it takes to enter South Korea has been extended because they cross multiple borders (Shin 2011; Jung 2019).

As they stay in China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some women experience childbirth. Thus, the number of third-country-born children increases. Sensing a threat to their safety, North Korean women often "elect" to get married for security reasons while hiding in China (i.e., to avoid forced repatriation to North Korea). In many cases, North Korean women go to inland China to escape the intensively patrolled border areas and choose marriage to avoid being caught. Otherwise, they are trafficked to Chinese men in rural areas who are usually poor or disabled (Shin 2011). Children born to these parents are illegal aliens because of the lack of documentation, which cannot be granted without the risk of having the mother repatriated to North Korea.

As a remarkable number of third-country-born children have begun to appea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ave continuously proposed the amendment of the Settlement Support Act in order

to protect them, since 2010. As their exclusion from the Act has been a debated topic, the definition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under Article 2 has been criticized for its narrow scope. Proposed bills have suggested revisions to include "the children (direct descendants)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broaden the scope of eligible protection and prevent the exclusion of third-country-born children. However, all attempts failed, and these children have not been included in the category of "North Korean defector."

While third-country-born children can become "Korean citizens," being included under the Settlement Support Act and becoming a "North Korean defector" is usually considered a matter of being accepted as South Korean officially and emotionally. This tendency has been displayed in recent disputes over the amendment of Article 2 of the Settlement Support Act.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to include them in the legal category of "North Korean defector" raises the question of who should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exclusively South Korean and whether the exceptional group should be expanded. In answering these questions about the definition and boundary in South Korea, economic, ethnic,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are entangled with androcentric concerns, human rights perspectives, and administrative expediency, but no consistent standard has been applied.

Initially, the economic burden seemed the main reason for the government's reluctance to expand the category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including third-country-born children would mean more money to be spent on this group, comprising more than half the children of North Korean background, in addition to the enormous budget that is already allocated to them.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Settlement Support Act (proposed by Myung-Chul Cho and nine other members) of 22 November 2012 states that the additional cost (for the increase in the initial settlement cash aid and housing rental aid for added family members) of including third-country-born children under the Settlement Support Act is estimated at 5.6 billion won (Government Legislation Support Center n.d.). As the amount allocated for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provision of settlement funds is 87 billion won, an increase of 6% is expected.

Through the amendment in 2017, however, the government narrowed the gap between the benefits of North Korea- and third-country-born children. Instead of including them in the legal category, providing partial benefits would have avoided additional controversy while minimizing the greater addition of economic costs. As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gradually decreased after peaking at 2,914 in 2009, the burden of additional costs would also have been reduc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 there is no need to consider the inclusion of third-country-born children in the legal category as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m and North Korea-born children in terms of protection and support provided although differences between them in areas such as educational support and healthcare prevail.

The exclusion of third-country-born children from the category of North Korean defectors affects them in terms of both benefits and identity as they are categorized differently from their mothers and siblings, causing confusion in their identities. They belong to the 'multicultural policy' category (policy for Koreans with foreign spouses and their children) as they have a foreign parent. North Korean mothers, however, oppose the idea of their children being treated as 'multicultural children' because in the South Korean context, 'multicultural' refers to means foreigners and not Koreans while North Koreans identify themselves as 'Koreans'.

The government's main concern is that other groups in similar situations, such as North Korean children born in South Korea, North Koreans currently in China, and Chinese nationals born in North Korea and resided there, may also fall under this category. Expanding the scope of beneficiaries will not only cost money but also spark controversy over the issue of fairness. To prevent the indiscriminat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A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rgues that certain criteria (i.e., Settlement Support Act, Article 2) must be satisfied for one to be considered a North Korean defector: the existence of a North Korean address and relatives, and the experience of escape.

The government's main concern other than the increase of cost is that other groups in similar situations, such as North Korean children born in South Korea, North Koreans currently in China, and Chinese nationals born in North Korea and resided there, may also fall under this category. To prevent the indiscriminat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A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rgues that certain

criteria (i.e., Settlement Support Act, Article 2) must be satisfied for one to be considered a North Korean defector: the existence of a North Korean address and relatives, and the experience of escap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rgues against expanding the target in the official amendment discussion of the Settlement Support Act on the grounds that third-country-born children have no experience of 'escape from North Korea'.

Assigning such a status to third-country-born children who have no experience of 'escape' from North Korea is at odds with the purpose of the Act (Article 1) and also unfair to the children of North Korean parents who were born after entry into South Korea.

Although the children born in China of North Korean women have not directly experienced crossing the North Korea-China or North-South Korea border, they have gone through other ordeals (e.g., hiding in other countries, undertaking a difficult journey to South Korea, and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settling down in South Korea) that are experienced by North Korea-born children as well. Such children live in constant fear of their mothers' forced repatriation to North Korea.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indicate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children born in North Korea and China as members of North Korean families in terms of providing them with protection and support once they settle in South Korea (NHRCK 2013).

Although the children born in China of North Korean women have not directly experienced crossing the North Korea-China or North-South Korea border, they have gone through other ordeals (e.g., hiding in other countries, undertaking a difficult journey to South Korea, and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settling down in South Korea) that are experienced by North Korea-born children as well. Such children live in constant fear of their mothers' forced repatriation to North Korea.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indicate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children born in North Korea and China as members of North Korean families in terms of providing them with protection and support once they settle in South Korea (NHRCK 2013).

If both parents are North Korean defectors, even children born in a third country are not excluded from the Settlement Support Act and are recognized as 'persons eligible for protection' (Article 2, section 2), whereas third-country-born children with one foreign parent (Chinese father in

most cases) are not recognized. Chinese descent is more of a problem than their place of birth in deciding their 'North Korean defector' status.

This exclusion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the Nationality Act, which, under Article 2, notes that a South Korean national is someone whose 'father or mother' is a Korean national at the time of birth. In other words, third-country-born children of North Korean mothers (South Korean citizens) and foreign (Chinese) fathers are legally nationals of South Korea, but the Settlement Support Act tends to discriminate against the children of foreign fathers without granting them the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Thus, aside from their legal status as South Korean, an androcentric perspective is reflected in determining a person's status as North Korean defector. Although the androcentric definition of a Korean national was revised in 1997 (the 1997 revision of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patrilineal descent ('bloodline' continuing only through paternal side) continues to be emphasized in Korean society. Regardless of their Korean citizenship, some Koreans believe they should be considered Chinese because their father is Chinese and that benefits should be granted to 'ethnic Koreans'.

Owing to the North Korean mothers' uncertain status, many children in China have remained stateless. If Chinese fathers register the children through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and the children are conferred Chinese nationality, they can attend school and are afforded healthcare. However, the mothers usually do not have rights to their children in such cases. Thus, registering a child can have contradictory effects. It can guarantee children their basic human rights but preclude their ability to migrate with their mothers.

If North Korean mothers can bring their children from China and register them as South Korean nationals, third-country-born children need to undergo an administrative process in South Korea. Many North Korean mothers wish to bring their children to South Korea, but not their Chinese husbands, because of the numerous unwanted marriages. However, if the child is brought in without the father's consent, there is the possibility of custody dispute. The government is concerned that nationality problems may arise if such children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North Korean defector' and provided financial aid. Third-country-born children can have both Chinese and Korean nationalities; however, China prohibits dual citizenship according to Article 3 of Chinese Nationality Law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2018). Thu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lieves that providing special protection and financial support may be construed as urging third-country-born children to surrender their Chinese nationality, an issue likely to cause diplomatic disputes with China.

Accordingly, the 2012 proposals to revise the Settlement Support Act included provisory clauses such as children 'under 19 years who do not have parents or guardians' and children 'born in a third country but who do not have foreign nationality', to limit the beneficiaries and prevent diplomatic disputes. Although confined to orphans and stateless children, the bills failed to pass the legislature, as did other bills. When a Chinese father later appears and insists on the child's Chinese nationality, the problem of custody disputes and the possibility of removal from the Act were cited as the reasons. If the other country's nationality alone matters in determining who qualifies as a 'North Korean defector' (and thus who is considered a South Korean), the proposed revisions limited to stateless children should be approved. However, the case of third-country-born children with foreign parents shows that foreign nationality and ethnicity are considered interwoven with the androcentric view in determining one's status as a 'North Korean defector' (and South Korean).

The government's position is that 'for minors whose parents passed away or whose survival is not assured, it is difficult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to prove objective facts of whether they are children of North Koreans or not'. There are also fears that people disguised as North Korean defectors may enter the country for settlement funds or that brokers who introduce routes to South Korea for money may force children's entry into the country against their will. Thus, the possibility of disguising their identity and the administrative inconvenience of securing proof of identity is another reason for not including third-country-born children in the category of 'North Korean defector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tried to justify this differential treatment, no convincing standard in decisions is seen in the Settlement Support Act. In the case of third-country-born North Korean children, their birthplace and mixed-race status, which they did not choose, hinder their inclusion. Despite continuous attempts to include them in the legal category, they remain excluded. The problem of forming an anomalous group and a blind spot like these children reveals the challenges prevailing in the North Korean defector policy (and immigration policy) of South Korea.

이미준(성균관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은 얼마나 올바른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은 얼마나 올바른가

이미준 (성균관대)

I. 정치적 올바름 논쟁의 부상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은 소수자로 간주되는 사회집단과 그 구성원을 대상화, 일반화, 소외시키는 언어, 정책, 문화 등을 비판하고 교정하고자 하는 행동주의적인 신념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한때 소련 공산당의 방침을 열과 성을 다해 지지하는 태도를 지칭했던 것으로, 70년대 미국 좌파들은 교조적이거나 부적절한 말을 하는 동료 좌파를 농담조로 비꼬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80년대 신우파가 신좌파가 주도하던 문화정치에 뛰어든 이래, 한때 좌파들 사이의 농담이었던 정치적 올바름은 올바름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의 영역이 되었다. 이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태도는 우파와 좌파를 구분하는 리트머스 종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적 올바름에 우호적인 이들을 좌파 민주당 지지자, 비판적인 이들을 우파 공화당 지지자로 분류하는 것은 신뢰도가 높은 분류법이다.

여러 학자와 논평가가 지적하고 있듯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논쟁이 확대된 배경에는 계급정치가 쇠퇴하고 문화정치와 정체성 정치가 진보의 주요 의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정치적 맥락이 있다. 이러한 맥락은 현재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한때 꽤나 미국적인 현상이었던 정치적 올바름 논쟁은 미국을 넘어서 많은 민주주의 국가로 번져가고 있다.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페미니즘, 성소수자 권리, 생태주의 등 정치 영역에서 문화투쟁이 부각되면서 정체성 정치와 정치적 올바름을 둘러싼 논쟁이 부상하고 있고, 이는 문화 컨텐츠의 주 소비층인 청년층 사이에서 더욱 활발하다. 특히 페미니스트 청년 여성과 반페미니스트 청년 남성 사이에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김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 최근 개봉한 디즈니 영화 '인어공주', 게임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와 같이 소위 'PC 묻은' 문화 컨텐츠에 대한 반페미니스트 남성들의 반발과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옹호는 더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본 논문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정치사상적인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정

치적 올바름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미국 대학의 커리큘럼과 스피치코드 논쟁을 중심으로한 논의(이종일 2016, 2019), 문화와 예술의 자율성과 정치적 올바름의 충돌에 대한 논의(김성윤 2021; 김주선 2018; 문형준 2017; 한송희, 이효민 2020; 한송희 2021; 홍진석 2018),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논의(이윤복 2022) 등으로 분류된다. 이와 구분되는 접근으로 본 논문은 정치적 올바름을 특정한 사회정의관을 바탕으로 한 행동주의적인 신념이라 파악하고, 정치적 올바름을 그것이 전제하는 사회정의관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전략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적 올바름의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을 개괄하며 정치적 올바름을 사회정의관과 실천전략으로 구분해 평가하는 본 논문의 접근을 정당화한다. 다음으로, 정치적 올바름의 주장들이 어떠한 사회정의관을 토대로 정당화되는지 검토한다. 이어서, 사회정의관을 실현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되는 정치적 올바름이 과연 어떤 점에서 그리고 얼마나 올바른 것인지 논의하며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II. 정치적 올바름의 등장배경과 비판

1960년대 이후 서구의 좌파들은 현재의 미국/서구 사회가 인종주의적, 성차별주의적, 이성애중심적, 제국주의적으로 구축되었다고 지적하며, 이 구조를 비판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즘의 슬로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신좌파운동은 기존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정치, 경제, 교육, 언어, 문화 컨텐츠, 관습 등 모든 영역에서 권력관계를 파악하고 재배치하려 했다. 정치적 올바름은 이러한 미시정치의 확산과 함께 등장한 행동주의적 신념이다. 그렇기에 정치적 올바름의 논의 대상 역시 권력이 작동하는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정치적 올바름은 ‘죽은 백인 남성’의 글로 가득한 대학의 커리큘럼을 재구성하고, 대학 내 스피치 코드를 만들어 소수집단에게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차별적인 구조를 반영한 일상언어를 중립적인 언어로 대체하고,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며 소수자를 비가시화하는 문화 컨텐츠를 비판하고 교정하는 운동들로 연결되었고,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신좌파적 문화정치는 1980년대 신우파가 결집하며 강력한 역풍을 맞게 된다. 신우파는 서구문명이 편협한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정초해 있다는 주장, 서구사회

에 여전히 구조적인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가 만연하다는 주장, 언어와 문화에 백인우월주의와 남성우월주의가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을 부정한다. 이와 동시에 신좌파 문화정치의 주요한 전략이었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 역시 확대되었다. 페미나치(feminazi)라는 조롱 섞인 표현이 보여주는 것처럼, PC주의자들은 이데올로기로 무장해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무지성적이고 맹목주의적인 독재자,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드는 오만하고 공격적이고 도덕주의적인 투사, 예술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미학을 과도하게 정치화하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자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이 우파에게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올바름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목하에 일상의 관습적인 행동과 언어사용을 평가하고 검열하며 상대방을 차별주의자로 낙인찍는다. 이는 첫째로 매커시즘을 비판하며 좌파가 옹호해왔던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고, 둘째로 특정한 정치관을 절대적 올바름이라 주장하며 자신의 관점을 다른 이들에게 강제하는 것이며, 셋째로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며 무례하다. 그렇기에 정치적 올바름의 대의에 일정정도 동의하는 이들도 이 운동이 때로 너무 지나치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논의를 종합하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원인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 올바름이 전제하는 사회정의관에 대한 비판이고, 다음은 정치적 올바름이 제시하는 정의관에는 동의하나 그 실천전략은 무언가 과하다는 문제제기이다. 이 둘은 그 근거와 논리를 서로 달리한다. 이에 다음 두 장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을 그 기저에 있는 사회정의관에 대한 비판과 실천전략에 대한 비판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정치적 올바름의 답변을 검토하기로 한다.

III. 정치적 올바름의 사회정의관

1. 정치적 올바름이 제기하는 사회정의의 문제들

정치적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법과 제도에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지만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집단의 특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소수자는 법적 차별이 철폐된 이후에도 여전히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기에 이를 교정하고

보상해야 하며, 다수는 소수자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하는 윤리적 책무가 있다는 규범적인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정치적 올바름의 기저에는 현재 사회가 차별적이고, 일원적이며, 배타적이고 따라서 옳지 못하다는 현실인식이 놓여있다. 비판자들은 바로 이 현실진단에 문제를 제기한다. 현실에서 경찰에게 부당하게 폭행당하는 흑인이 있는 것은 맞다. 성추행을 당하는 여성, 조롱받는 동성애자가 있는 것도 분명 사실이다. 다만, 이것을 부도덕하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 개인의 범죄로 보지 않고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을 집단으로 분류해 서로 다른 기회를 부여하는 법적, 제도적 차별은 수십년 전 철폐되었다. 법과 제도의 어디에도 흑인을 폭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언급은 없다. 모든 개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다면 어디에 백인과 남성의 구조적 특권이 남아있다는 것인가?

법적, 제도적 차별이 철폐된 현재, 권력은 노골적으로 행사되지 않는다. 보다 정확히 말해, 남성, 백인, 이성애자의 권력이 노골적으로 행사될 때 혹자는 이를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부도덕한 개인의 일탈'이라 명명할 수 있다. 비판자들이 볼 때 PC주의자들은 소수 개인의 문제를 사회정의의 문제로 부당하게 치환하고 있고, 그 목적은 자신을 피해자로 표상하여 자신의 실패를 사회구조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국 청년세대의 공정성 논쟁에서 많은 청년남성들이 지지했던 바로 그 입장이기도 하다. 대체 청년남성 개개인이 개별 여성에 비해 어떠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려면, PC주의자들은 법과 제도에 명시되지 않은 권력이 실제로 행사되고 있고, 이것이 사회 부정의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논의에 앞서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두 사례는 PC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명시되지 않은 권력이 행사되면서 집단 간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 사례이지만, 비판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부정의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다.

1) 성별고정관념과 임금격차

여기 생산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두 사람이 있다. 같은 근무처라고 하더라도 흔히 남성과 여성에게는 서로 다른 일이 주어진다. 남성은 주로 정규직화가 가능한 직무, 여성은 비정규직 직무로 배치가 되고, 임금 역시 직무의 격차를 반영해 남성이 약간 높다. 이때 남성이 배치되는 직무는 더 많은 근력이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임금이 더 높

게 책정되며, 훈련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비정규직을 뽑아서 인력을 대체하는 것보다 정규직 전환을 통해 숙련된 인력을 직장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제 남성과 여성은 상당히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서로 다른 임금을 받게 된다. 서로 다른 직무에 배치되기에, 서로 다른 숙련도를 요구하기에 서로 다른 임금을 지급받는다.

직원A와 직원B의 일은 실제로 다르며 직원A의 일이 더 많은 육체적 노동 혹은 기술적 숙련도를 요구할 때, A와 B가 다른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이 예시에서 남성은 실제로 더 많은 근력을 요구하고 더 많은 기술숙련도를 요구하는 일을 했기에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 그 결과 나타난 임금차이를 남성특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적어도 이때 남성이 가진 특권은 '그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월급을 더 많이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별고정관념이다. 개개인이 실제 가진 능력이 아니라 성별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및 고정관념(남성이 육체노동을 더 수월하게 해내고, 기계를 더 잘 다룬다는 것)에 따라 직무가 결정되고, 이것이 임금격차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때 남성은 의식적으로 성별고정관념을 창출해내고 이를 강제하기 때문에 특권층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PC주의자들은 의도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성별고정관념에 따라 남성은 '자연스럽게' 기술을 더 익힐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하고 여성은 '자연스럽게' 쉽게 다른 비정규직으로 대체가능한 업무에 배치되면서 남성이 승진과 임금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 남성이 남성이기에 얻는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PC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바로 책임소재의 문제이다. 성별 고정관념은 남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역시 가지고 있으며, 남녀 모두에 의해 재생산된다. 한 예로, 우리는 일상에서 여자라서 기계를 못 다루겠다며 남성을 찾는 여성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은 재생산되고 위의 사례처럼 임금격차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이는 남성들이 성별고정관념고착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도적, 조직적으로 고정관념을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현재가 정의롭지 않다면 우리는 원인을 찾아 교정하고, 부정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개별 남성은 잘못이 없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 해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고, 체력적, 기술적으로 더 많은 역량을 요구하는 직업에 높은 보수가 책정되는 것 역시 정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남성은 남성특권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는가? 남성집단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지도 않았고 공식적으로 강제하지도 않은 성

별고정관념의 결과물에 대해 여성집단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가?[1]

2) 문화 컨텐츠의 비가시성과 개인의 취향

최근 디즈니에서 제작한 인어공주 영화가 국내에 개봉했다. 영화는 제작당시부터 정치적 올바름 논쟁에 휩싸였다. 디즈니는 영화산업에서 다양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원작에서 붉은 머리의 백인이었던 여자 주인공 역할로 흑인 배우를 캐스팅했는데, 원작과 영화 주인공의 인종이 달라지면서 문화 컨텐츠에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원작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를 둘러싼 원본주의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디즈니의 시도가 백인중심의 영화산업에 인종적 다양성을 더하는 것이기에 정당하며, 가치 있다고 주장한다. 영화에서 유색인종이 주연을 맡는 경우는 적으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많은 경우 유색인종은 조연으로 캐스팅되고, 인종과 출신문화권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한 전형적 인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영화산업은 이처럼 주도적인 역할은 백인이 맡으며 유색인종은 범죄자 혹은 감초 역할을 하는 인종역할구별을 자연스럽게 재생산해왔다.

문화 컨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문화 컨텐츠가 소수자를 비가시화하고 주류에게 정상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데에 책임감을 가지고 컨텐츠를 창작, 소비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컨텐츠에서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올바름의 핵심적 주장이었다. PC주의자들이 볼 때 디즈니의 시도는 이러한 정치적 올바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유색인종 여성에게 핵심 캐릭터를 연기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디즈니 영화에 선망받는 인어공주 역할로 흑인 여성을 등장시키면서 어린이들이 흑인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에서 인어공주의 캐스팅은 바람직하다.

인어공주 논란의 예처럼, 정치적 올바름 논쟁의 주된 공간은 문화이다.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이들은 일상생활의 언어사용, 문화 컨텐츠에 반영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대

---

[1]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치적 올바름 비판의 최선봉에 서 있으며, 한국에서도 청년 남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조던 피터슨의 이야기에 잘 드러나 있다.

"내가 누린 백인이라는 특권이 내가 현재 이룬 성과에 얼마나 기여를 했다는 거죠? 5퍼센트? 15퍼센트? 아니면 75퍼센트가 되나요? 당신은 그 점에 대해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피터슨 외 2019, 123)

상화, 배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동안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TV 시리즈와 영화에서 유색인종, 성소수자, 다른 문화권 출신의 등장인물들이 출연하는 것은 이제 더이상 낯설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인물들이 출연하지 않는 영화는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PC의 성취는 동시에 정치적 올바름의 기치 하에 벌어졌던 문화산업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에 대한 백래시를 불러오고 있다.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호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외압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화혁명 때문에 문화 컨텐츠의 선택권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PC반대자들이 볼 때 정치적 올바름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재단한 올바름을 강제하고, 다양성이라는 명목 하에 문화 컨텐츠를 오로지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들로 일원화하고 있다.

두 입장의 정당성을 평가할 때 관건은 문화 컨텐츠에 사회정의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PC를 비판하는 시각에서 검토해보자. PC주의자들에게 더 많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비판자는 문화 컨텐츠에서 소수자가 재현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PC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때 PC주의자들의 지적에 동의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화 컨텐츠를 거부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시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문화 컨텐츠는 사회의 구조를 반영해 만들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컨텐츠의 소비는 지극히 사적인 취향의 영역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소비는 흔히 취향의 영역이라 간주된다. 이 말이 함축하는 것은 취향은 사적인 것이고, 그렇기에 공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적용되는 영역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들은 자신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문화 컨텐츠를 선별해서 향유한다. 어떤 컨텐츠는 매우 도덕적이지만 배우들의 연기력이 떨어지며, 어떤 컨텐츠는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로 가득차 있지만 영상미가 뛰어나다. 이때 개인이 특정 컨텐츠를 소비한다는 것이 그가 그 컨텐츠가 보여주는 많은 올바르지 못한 지점들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람들은 올바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미를 위해서, 자극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컨텐츠를 소비한다. 우리가 사적인 취향과 공적 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은 구분되는 것이고 개인의 취향은 사적인 것이라는 데에 동의한다면, 개인의 사적 취향에 사회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내가 공적 영역에서 여성과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아랍계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위기상황에서도 외모를 치장할 여유를 잃지 않는 미모의 여성을 백인 히어로가 구해내는 다양성이 부족한 영화를 즐겁게 소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PC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나는 문화 컨텐츠에 다양성이 부족하고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재생산한다는 데에 어느정도 동의하기에, 문화 컨텐츠가 더 다양해져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PC주의자들이 취향의 영역에까지 올바름의 잣대를 들이대며 문화 컨텐츠를 검열하고 일원화하려 들며, 소비하는 컨텐츠를 기준으로 개개인을 올바르고 깨어 있는 시민과 차별주의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 컨텐츠 소비를 취향의 문제로 보는 입장에서 이러한 PC주의자들의 주장은 한식을 꺼려하고 양식을 좋아하는 풍조 때문에 한국 쌀농가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식을 먹는 이들을 사대주의자라 비난하고 전국의 양식당을 모두 한식당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논리적 비약이다.

정리하자면, 정치적 올바름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구조에서 이득을 얻고 있는 특권층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며, 권력은 도처에 편재하기에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정의가 관철되는 것이 올바르다는 정의관에 바탕을 둔 행동주의적 신념이다. 하지만 비판자들이 볼 때 이는 내게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특권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동일한 정의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기에 올바르지 못하다.

그렇다면 PC주의자들은 이 비판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정의의 문제를 관계망 안에서 파악하는 아이리스 영의 정의관이 정치적 올바름의 사회정의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다. 다음 절에서 이를 설명할 것이다.

2. 아이리스 영의 사회정의관과 정치적 올바름

권리중심적인 자유주의 정의관은 현실을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권리의 침해여부를 바탕으로 사회현상이 정의로운지 판단한다. 예를 들어 롤즈는 원초적 상황에서 합리적인 개인들이 합의에 따라 도출했을 것이라 상정되는 정의원칙들을 바탕으로 사회정의를 평가한다. 여기서 첫 번째 정의원칙은 일련의 권리들이 평등하게 주어졌는지를 묻고, 두 번째 정의원칙은 분배의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조건을 규정한다.

난점은 이때 사회집단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이 결여되어서, 혹은 사회에서 공유되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개인 권리의 침해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 영화에서

백인이 CEO로 등장하고 조선족은 범죄자로 등장한다면 이것은 어떤 권리의 침해인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아유회를 가서 여성직원들만 자연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어떤 권리의 침해인가? 이처럼 개별 사례를 보았을 때에는 불쾌하기는 해도 특정한 권리의 침해라고 주장하기 어렵지만 사례들을 모아서 전체를 그려보면 집단에 따라 역할이 구분되고 위계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한 권리중심적인 자유주의 정의관은 집단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개인 권리의 침해로 전환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기에 권리중심적 정의관을 바탕으로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제기를 정당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제기를 정당한 정의의 요구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집단에게 고유한 경험과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단위로 현상을 조망할 때에 나타나는 사회집단간 위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의관이다. 그 예시가 아이리스 영의 사회정의론이다.

영에게 사회정의는 소극적으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정의된다. 소극적으로 정의할 때 사회정의는 "제도화된 지배(domination)와 억압(oppression)을 철폐하는 것(Young 2011, 15)"으로, 정의의 대상은 "잠재적으로 집단적인 결정(collective decision)의 대상이 되는(Young 2011, 16)"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노동분업, 그리고 문화를 포함한다(Young 2011, 22). 적극적으로 정의할 때 사회정의는 "사회가 다음 두 개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데에 필요한 제도적인 조건들을 포함하고 지원하는 정도"로 규정된다. 이 두 개의 가치는 "각자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 및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기개발과 표현이라는 가치,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의 조건들을 결정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기결정의 가치이며, 영은 자기개발과 표현이 제약 받는 상황을 억압(oppression)으로, 자기결정이 제약 받는 상황을 지배(domination)로 규정한다(Young 2011, 37).

이 중 우리 사례와 연결되는 것은 억압이다. 영은 억압을 착취, 주변화, 무기력화, 문화제국주의, 폭력이라는 다섯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주목할 것은 영이 억압은 "집단들의 조건(Young 2011, 40)"이라 말하며, 억압의 단위를 집단수준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억압은 한 집단과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한 예로, 영은 호텔의 벨보이, 식당의 보조웨이터, 짐꾼과 같이 다른이들에게 낮은 위치에서 봉사하는 직종에 당연스럽게 백인을 고용하는 것을 피하고 유색인종을 고용하는 것을 인종에 따른 노동분업을 바탕으로 한 착취의 예로 든다(Young 2011, 52). 이때 개인의 권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흑인이 특정 업종

에 더 많이 고용되는 것을 권리의 침해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영의 시각에서 볼 때 사회에는 사회집단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억압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한 집단이 의식적으로 다른 집단을 억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Young 2011, 41). 위의 경우에서 백인 관리자와 흑인 종업원은 그저 성실히 자기일을 할 뿐이다. 하지만 각자가 누군가를 차별하겠다는 의도 없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에도 구조적인 억압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제시한 예에서 PC주의자들의 문제제기가 영의 사회정의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성별고정관념

우리의 첫 번째 사례에서 문제는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직무가 배정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정의롭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영의 기회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에게 기회는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Young 2011, 26).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도 고소득층 학생과 동일하게 명문대에 진학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두 학생이 명문대 진학에 필요한 조건들을 동일하게 가졌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닌 것처럼, 기회는 주어지는 것(possession)이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enablement)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때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는 규범들과 실천들, 특정한 사회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들, [사회내의] 수많은 행동들과 실천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더 큰 구조적 가능성들(Young 2011, 26)”에 영향받는다. 그렇기에 사회정의를 누군가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상황에서 개인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혹은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구조(Young 2011, 26)”를 평가해야 한다.

영의 사회정의관을 바탕으로 평가할 때 우리의 첫 번째 사례는 억압에 해당한다. 성별 고정관념은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해보기도 전에 미리 판단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능력과 적성을 미리 가늠하도록 하며, 이에 자연스럽게 성별에 따라 두 집단에게 다른 가능성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의 평등을 제약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사례에서 각자 서로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임금격차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여기서 정의롭지 못한 것은 고정관념이 성별에 따라 적합한 직업의 선택지 목록을 서로 다르게 구

성했다는 것이다.[2]

그렇다면 남아있는 문제는 책임이다. 이 책임의 문제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피터슨의 발언에서 제시된 것처럼, 내가 거둔 성취에 내가 가졌다는 특권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확히 이야기하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부도덕한 죄인 취급하는 데에 불쾌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 책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영이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call for taking responsibility)과 행위자를 비난하는 것(blame)을 구분한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위자를 비난하는 것은 그를 감금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조직에서 해고하는 것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힐난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이는 과거에 한 일들을 바탕으로 그를 처벌하거나 응징하는 것이기에 과거지향적이다. 이와 달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행위이다. 이는 행위자에게 '지금부터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가져왔던 생각과 감정, 별다른 생각없이 했던 말들을 성찰하고, 자신의 습관과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Young 2011, 150-152).

즉, 남성이 가진 특권(우리 사례에서는 성별고정관념에 따라 남성에게 더 전망 있는 직무가 주어지는 것)을 지적하는 것과, 개별 남성을 비난하고 그의 성취를 폄하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이때 올바르지 못한 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가진 선입견, 고정관념이 성찰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변화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남성에게 여성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가? 한편으로 그렇다. 현재의 직무배치 관행을 성찰하고 교정할 경우, 일부 남성은 자신의 자리를 보다 업무에 적합한 여성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남성의 기대소득이 줄어들지라도 이러한 변화가 올바른 것이기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우리 사례의 남성 역시 자신의 적성과 업무수행적합도를 다시 평가받아야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혹여 다른 업무에 배치된다면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가 그 이상으로 책임을 지고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

[2] 우리의 사례와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더해서 왜 이때 여성에게 주로 주어지는 직업들은 보수가 낮게 책정되는가 역시 영에게는 사회정의의 문제이다.

2) 문화 컨텐츠의 소비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는 문화 컨텐츠의 소비가 사회정의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적 자유의 문제인지를 묻고 있다. 영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는 사회정의의 대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영은 문화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를 억압의 한 형태로 제시한다. 집단들의 서로 다른 문화는 원칙상 동등하지만 실제 집단 간 권력격차를 반영해 위계가 상정되기 마련이다. 문화 제국주의는 문화 컨텐츠가 주류 집단의 관심사, 경험, 관점을 반영해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주류 집단인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비주류 집단의 문화를 이색적인 것으로, 비주류 집단 등장인물을 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체화한 전형적인 인물로 그려내면서 주류가 아닌 이들을 타자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비주류집단의 경험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주류문화에 별다른 영향을 못주거나 하위문화로 간주되고, 주류문화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라 받아들여진다. 그렇기에 비주류집단의 구성원들은 주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제스쳐, 행동, 생각, 언어 등을 조정해야 한다(Young 2011, 58-60). 이는 개인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서 어떠한 자질, 행동, 태도를 기대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주면서 자신이, 그리고 타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예단하게 한다.

인어공주 논쟁 역시 문화 컨텐츠가 문화 제국주의를 확산시키고 재생산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정의의 문제가 된다. 여기서 다수의 문화 컨텐츠들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할 때, 이것이 문화 컨텐츠 제작자들이 그동안 의식적으로 문화 제국주의를 실천해왔다는 의미는 아니다. 각자는 자신의 지식, 상식,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을 한다. 다만 이 지식, 상식, 상상력은 사회 구조와 실천을 반영하고, 그렇기에 어떤 캐릭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지 상상하는 그 상상력에 이미 문화 제국주의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는 공주를 떠올릴 때 날씬한 금발머리의 소녀를 떠올리고, 영웅을 떠올릴 때 강한 백인 남성을 떠올리며, 테러리스트를 떠올릴 때 유색인종과 소수민족을 떠올린다. 이는 백인이, 여성이, 남성이 내가 무엇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

문화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다면, 인어공주 논란에는 원본주의 논란 외에 다른 층위가 있다. 인어공주를 특징짓는 것은 매력적인 목소리이고, 이 목소리는 영화에서 인어공주를 연기한 배우의 강점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배우는 인어공주를 연기할 자

격이 있다. 게다가 모든 리메이크작은 원작을 어떤 식으로든 변형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어공주의 인종이 바뀐 것이 왜 그토록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인어공주의 인종과 외모에 대한 논쟁이 이토록 과열된 이유는 많은 이들이 원작의 변형을 용인할 때, 백인을 흑인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매우 이질적으로 느끼고 이를 불쾌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 혹은 원작과 부합하지 않는 영화의 다른 예를 제시해보자. 페미니즘의 확산 이후 역사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제작할 때, 실제 있지도 않았던 주체적이고 영향력 있는 여성인물을 등장시키거나 실존했던 여성인물의 활약상을 크게 확대하는 현상이 늘어났다. 많은 이들이 더이상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똑같은 원작에 대한 왜곡인데 등장인물의 인종을 변화시키는 것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만일 우리가 덴마크 백인인 인어공주를 미국 백인으로 바꾸었다면 같은 논란이 있었을까? 아니라면, 대체 비판자들이 말하는 '원작주의'는 어느 정도의 변용을 허용하고, 또 하지 않는 것인가?

여기서 나는 인어공주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인종주의자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인어공주 논란을 개별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불만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다. 다만 인어공주는 '당연히', '원작을 반영해' 백인이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생각에 여러 질문을 던져보며 인어공주의 인종을 바꾸는 것이 정말 말도 안되는 것인지 질문해볼 수 있다는 것, 이를 토대로 우리가 인어공주의 인종을 바꾸는 것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질문하고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문화는 당연하지 않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이질적이라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이 구분은 공중의 결정을 통해 논의되고 변화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영이 제시하는 사회정의의 문제와 연결된다.

영은 도처에 편재한 문화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문화정치(cultural politics)의 역할을 강조한다. 영은 "제도적인 조직, 공중의 행동, 사회적 실천과 습관들, 그리고 문화적 의미들은 이것들이 잠재적으로 집단적인 평가와 결정의 대상이 되는 한(Young 2011, 34)" 정치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문화정치를 "상징, 실천, 말하는 방식에 질문을 제기하고, 이것들이 공중의 토론 대상이자, 명백히 선택과 결정의 문제(Young 2011, 86)"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한다. 이것이 사적 취향을 말하는 이들이 비판하는 것과 같이 문화정치가 사적영역을 없애고 모든 것이 공중의 통제 영역으로 만든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영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 서로 다른 제도, 행위, 태도가 부여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누구도,

어떤 행위도, 한 사람의 삶의 어떠한 측면도, 사적인 것이라 강제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인 제도도, 실천도, 공중의 토론 대상이 아니고 공중 앞에서 표현될 수 없는 것이라고 미리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Young 2011, 120).

즉, 문화는 문제제기, 토론, 변화의 대상이다. 그리고 문화 제국주의에 대항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자연스러운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그렇기에 변화의 대상임을 밝히는 작업들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Young 2011, 153). 이는 올바름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적인 선택과 즐거움을 포기해야 한다는 교조주의적인 입장과는 구분된다. 우리에게는 다만 사적인 선택들이 어떠한 인식들을 반영하는 것인지, 그리고 문화 컨텐츠들을 어떻게 만들고 소비할 때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문화 컨텐츠의 소비를 사적인 것이라 간주하고 성찰과 변화 바깥에 두는 것은 분명 쉽고 편안하며 즐겁지만, 이는 책임을 다하는 행동은 아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이 책임을 공적인 영역에서만 논의하는 것은 매우 협소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내가 어떤 문화 컨텐츠들을 소비하는지, 이것이 어떤 인식들을 반영하고 재생산하는지를 생각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반드시 그다지 올바르지 못한 컨텐츠 소비를 멈추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내가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즐기는 것들에 대해 성찰하고 이에 대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IV. 정치적 올바름의 실천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 PC와 약자의 전략

앞 장에서 우리는 정치적 올바름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영의 논의에 기초해 사회정의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제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그 실천전략의 올바름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을 특징짓는 것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사회집단에 대한 억압을 적시하고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 실천들이다. 이 실천들은 다양한 전략들을 포함한다. 문

제를 지적하기, 비판자들과 논쟁하기,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그리고 SNS가 확산되며 동시에 확산된 소위 좌표찍고 공격하기 등이 그 예이다. 이 전략들은 PC주의자들 뿐 아니라 이에 반대하는 집단들 역시 사용하는 것들이다. 그렇기에 양쪽이 무례하고 원색적인 전략들까지 기꺼이 동원해서 '문화전쟁(culture war)'에 참전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이 반드시 공격적인 전략을 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정치적 올바름은 개인화된 운동이기 때문에 여타 조직적 사회운동처럼 지도부가 행동전략을 지시하고 관여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정치적 올바름은 비슷한 대의를 공유한 사람들 간의 개별적 실천들로 구성된다. 하지만 80년대부터 정치적 올바름의 주된 실천전략은 자신들의 주장이 올바르다는 것을 선언하고, 따라서 자동적으로 비판자들을 올바르지 않은 집단으로 호명하며,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반대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공격적 전략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대립을 마다하지 않고(confrontational), 대놓고 따지고 드는(in-your-face)" 문제제기방식을 가리켜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은 정치적 올바름의 스타일이라 말한다 (Hall 1994, 168). 그리고 이 스타일은 정치적 올바름의 대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도 PC가 무언가 '과하다'라는 인상을 가져오는 원인이기도 하다.[3]

이러한 공격적 전략이 올바른가? PC를 사회정의관과 전략으로 구분하여 그 전략만을 평가할 경우,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판단은 이 전략을 옹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무례하고 나홀로 도덕적이며 공격적인 전술을 옹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때 많은 점잖은 시민들은 PC가 사회정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지만, 사회변화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점진적으로 전개해가는 것이 더 올바르며,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PC주의자들은 여기에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PC주의자들을 분노를 쏟아부을 곳을 찾는 싸움꾼들이라고 단정지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이 왜 이러한 전략을 택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내가 사회변화를 원하는 개인일 때, 나는 어떠한 실천들을 할 수 있는가? 둘째, PC의 전략이 과연 효과가 없는가?

---

[3] 한 예로, 스티븐 프라이는 이렇게 말한다.

"설교 조의 개입, 경건한 체하는 태도, 독선, 이단 사냥, 비난, 수치심 주기, 증거 없이 하는 확언, 공격, 마녀사냥식 심문, 검열 등이 PC에 결합되어 있어요 … 제가 PC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PC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얼마나 옳은지에만 집착합니다." (피터슨 외 2019, 95)

내가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개인이라고 생각해보자. 나는 직장에서 성차별적인 발언들을 종종 듣고,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조직 안에서 문제제기를 해보았으나, 내게 돌아온 말은 더 조심하겠다, 그런데 나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직장 동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성들은 왠지 나와 대화하는 것을 피하고, 나는 조직 안에서 겉돌게 되었다—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아주 많이 알고 있다.

피억압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이야기하고, 토론을 통해서 조직을, 나아가 사회를 바꾸어가는 것이 가능하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다. 내 문제제기가 편향적인 것, 예민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논의해보아야 하는 토론의 대상이라는 데에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동의해야 하고, 이 토론 과정에서 나는 내 문제의식을 더 잘 벼려낼 수 있는 데에 필요한 자원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이들은 피억압집단의 경험과 관점을 취해서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정도로 열려있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토론을 통해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류집단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꿀 의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주류일 때 소수자가 토론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조직의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수자들의 온건한 문제제기는 보통 예의 바른 형식적 답변(검토해보겠다)을 받아내는 데에 그치고 만다.

정치적 올바름은 이와 달리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해서 상대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성희롱성 발언을 종종 하는 직장 상사는 팀원의 조용한 문제제기는 무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성들이 회사로 찾아와서 대자보를 써붙이고 공개적으로 소리치며 망신을 주는 것은 두려워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이 사람의 여성관을 바꾸어 놓을 것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 사람의 행동을 일정정도 교정하는 효과는 가질 수 있다. 내면에서는 여성들이 예민하게 나오고 있다며 분개할지라도, '요즘 세상에 말 잘못 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하는 일은 일어날 법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중에는 여성들의 문제제기를 듣고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PC는 사실 꽤나 효과가 있는 전략이 아닌가? 최소한 이제 그 직장의 여성들이 성희롱성 발언을 듣는 빈도는 줄어들 것이니 말이다.

이 점에서 PC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전략을 '약자의 전략'이라 방어할 수 있겠다. 주류의 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려면 거칠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논리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PC가 올바르지 않다면, 피억압집단의 구성원들의 문제제기를 제대로 포용할 수 있는 관행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소수가 예절과 관행에서 벗어나 무대포적인

전략을 펴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얼마나 올바른가?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의 관점을 포용할 수 있는 관행과 제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공격적인 전략을 펴는 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이들에게 당신들에게도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고, 따라서 이 역시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

2. 정치적 올바름에 남아있는 문제들

그렇기에 정치적 올바름은 약자가 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나름의 의의를 지닐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글에서는 아이리스 영의 논의를 활용해 정치적 올바름에 남아있는 반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영은 사회정의를 공중의 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로 파악한다. 이때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경험, 감정, 관점, 의문을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비배제적인 공중 심의가 전개되는 공론장이고, 다른 하나는 특히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억압 집단들이 충분히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집단 대표제이다(Young 2011, 183-191). 우리의 논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전자이다.

영은 공론장의 참가자들이 사회현상을 평가할 때 불편부당성(impartiality)에 기초해야 한다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시각을 비판한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이 불편부당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각자가 자신에게 매몰되어서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영이 볼 때 불편부당성은 자기중심주의로 환원될 수 없는 집단간의 경험과 관점의 차이를 무시한다. 영은 “도덕적 관점(a moral point of view)”은 “나 홀로 자기입법을 행하는 이성작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 욕구, 그리고 관점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타자들과 지속적으로 마주할 때”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Young 2011, 106). 다시 말해 도덕적 추론은 “대화적이라는 것,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승인받기를 원하는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주체들 간의 대화의 산물이라는 것(Young 2011, 106)”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 올바름에는 방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PC주의자들은 사회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의 참여와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의 논의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신의 습관과 행동을 다시 생각해보며, 집단 구성원들 간의 길고, 때로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으며,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지난한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다. 다른 집단구성원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더라도, 때로 감정이

상하더라도 다양한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행들과 제도들을 만들고, 이 대화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 책임있는 태도이며, 사회변화는 여기에 기초해 만들어진다.

하지만 정치적 올바름은 개인의 책임을 지나치게 도덕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즉, PC주의자들에게 책임있는 개인이 된다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름을 추구하는 도덕적 행위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서로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이야기하는 토론장을 형성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아래에서 이를 보다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1) 정치적 올바름과 계급의 문제

먼저, 정치적 올바름은 구조의 문제를 개인들의 정치참여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개인의 참여,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 PC의 특징이다. 이것은 쉽게 사회부정의가 계속되는 원인을 '깨어 있는(woke)' 시민이 되지 못하고 낡은 차별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서 찾으며 이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이들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로 이어진다.

여기서 문제는 이 '깨어 있음' 이 사실 상당히 계급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깨어 있는' 시민은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타집단에 열린 태도를 보여주며, 다양성을 추구하는 컨텐츠를 자랑스럽게 소비하는 이들이다. 이러한 속성들은 분명 개개인이 자신의 취향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동시에 내가 속한 관계망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다.

현실에서 타집단과 마주할 기회는 교육수준에 따라, 거주지에 따라, 일터의 인적 구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주어진다. 대학을 다니며 다양한 사회집단, 다양한 생각, 문화를 접해본 중산층 가정 출신의 화이트칼라와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라온 노동자는 다양한 사회집단과 상호작용해 본 경험, 문화를 접해본 경험에서 차이가 난다. 유감스럽게도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시대에 태어나서 승무원 대신 스튜어디스, 의사 대신 여자 의사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노년층 역시 젊은 세대와 다른 단어들에 익숙하고, 다양한 사회집단과 교류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관계망과 환경의 차이는 쉽게 개인의 일상언어, 타집단에 대한 태도, 선호하는 문화 컨텐츠의 차이로 이어진다. 즉, '깨어 있음'은 개인의 책임성 못지 않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PC는 이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백래시가 인종적 특권과 계급적 억압이 교차하는 백인 노동자 계층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동안 넉넉하지 않은 생활이나마 유지하기 위해서 성실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손에 굳은살 하나 없이 값비싼 유기농 음식이나 찾아 먹는 진보주의자들에게 특권을 성찰하지 못하고 공감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별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내 행동과 언어생활을 돌아볼 소중한 계기로 삼을 것인가?

정치적 올바름은 사회의 구조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타집단에 대한 태도, 행동, 고정관념을 개인의 윤리성 문제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도덕주의는 서로 다른 사회집단의 구성원들 간의 대화를 가로막으면서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승인받기를 원하는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주체들 간의 대화(Young 2011, 106)"를 필요로 하는 도덕적 추론을 어렵게 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스튜어트 홀은 PC가 새롭고 급진적인 정치적 아젠다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바름을 관철시키겠다는 낡은 전위정당의 전략을 바탕으로 실현시키려는 시도라 말한다(Hall 1994, 175-177). 이는 다수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헤게모니 투쟁과는 상반되는 전략이자(Hall 1994, 176), 동시에 영이 강조하는 것처럼 대화를 통해 올바름에 대한 집단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가로막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2) 죄책감의 정치와 비난의 정치

다음으로, 정치적 올바름은 일상적인 언어, 태도, 무의식적인 생각, 행동 등이 사회구조를 반영하는 것이고 따라서 성찰과 변화의 대상이라 주장하는 미시정치에 바탕을 둔다. 미시정치는 분명 기존 공적, 제도적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피억압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정치가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내 참여를 통해 사회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과 효능감을 크게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미시정치는 모든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정치가 관여해야 하는 대상을 무한히 확장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이제 식탁에 어떠한 음식이 올라오는지도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다. 내 식탁에 올라온 돼지고기는 어떠한 사육환경에서 돼지를 키워 어떻게 도축한 것인가? 내가 웃으면서 본 TV 드라마는 사실 남성중심적인 시각에 기초해 여성을 구해주고 지켜줘야 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가 사용하는 인터넷 신조어인 결

정장애는 장애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반영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일상생활의 정치가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PC의 도덕주의적인 태도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 글에서는 죄책감의 정치와 비난의 정치라 부르고자 한다. 책임감 있는 시민은 올바름을 추구해야 한다. 올바름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는 일상을 사회구조의 산물로 바라보며 성찰해야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다른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는 올바르지 못한 시민이 된다. 이때 일상생활의 정치는 쉽게 죄책감과 비난으로 이어지게 된다. 일상의 언어, 태도, 행동, 취향 등이 올바름의 평가영역이 되면서, 나는 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의 억압적 구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자주 확인하게 된다. 이는 일상적인 죄책감을 불러온다. 동시에 도처에 편재한 억압을 인식하지 못하는 동료 시민에 대한 불만은 커져간다. 대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없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때 비극은, 모든 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잘못된 관념과 의미를 드러내고 이를 진실된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Hall 1994, 181)"라는 정치관에 입각한 PC는 결코 끝나지 않는 각개전투에 돌입하게 된다. 동물사육에 대해 열심히 논쟁하고 있는 와중에 아보카도가 사막화를 발생시키고 있기에 이를 소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논쟁이 등장하고, 흑인 인어공주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이제 흑인 슈퍼맨 논쟁이 다가온다. 물론 이때 영화계의 동양인 비가시화를 놓치는 것 역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동양인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개별 전투, 개별 논쟁을 이긴다고 해서 문화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영의 시각을 따른다면, 관건은 이 전투를 대화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PC의 공격적인 전략은 이를 매우 어렵게 한다.

일상정치를 개인의 책임성 문제로 환원할 경우, 다른 이들과 대화하려는 의지는 자발적으로 또 타의에 의해 제약 받게 된다. 윌리엄 데레시위츠(William Deresiewicz)의 기고문은 진보적인 PC문화가 주도적인 미국 사립 대학들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PC의 가치에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입을 다무는지, 이것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대학 내에 의견의 다양성을 축소시키는지를 보여준다.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했을 때 가지게 되는 것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낙인과 사회적 추방이라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쉽사리 입을 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PC주의자들이 이보다 큰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PC에 찬성하는 학생들도 내 모든 발언이 올바르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기에,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공간에서 본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편안해하는 역설이 나타난다 (Deresiewicz, 2017). 이처럼 PC는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올바름을 것을

의심하고 검열하며, 올바름을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도록 한다. 이러한 개인의 책임성에 대한 강박이 PC의 본질이라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정치적 올바름은 이러한 공격적 전략들을 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PC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해 볼 수 있다. 일상의 불편함과 자기검열은 피억압집단의 구성원에게는 일상이다. 성희롱성 농담을 듣고도 함께 웃어야 하는 여성, 지역비하 발언을 들어도 예민하게 굴지 말아야 하는 특정 지역 출신인들은 그동안 늘 일상이 불안하고 불편했다. 이렇게 보면, 그동안 주류가 누려왔던 자유롭고 편안한 일상은 그동안 우리가 피억압집단 구성원들의 불안감, 모멸감, 소외감, 분노를 무시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일상에서 순간순간 모멸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다수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해야 그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굴욕적이고 기만적이다. 우리는 피억압집단에게 사회부정의를 하나씩, 조금씩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기대를 주어야 하고, 이 책임은 우선적으로 주류집단에게 있다.

이 지적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PC의 전략은 이제 소수만 소외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을 가져오는 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모두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라 한다면, 정치적 올바름의 전략은 이를 구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우리가 영의 입장에 따라 사회정의는 대화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필요한 것은 상이한 경험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때 PC는 나와 생각이 비슷하거나 비슷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동안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내 속을 터놓아도 나를 비난하고 망신주지 않을 사람들과의 대화를 촉진할 수는 있고, 이를 통해 피억압집단의 구성원들은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를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문제는 PC가 경험과 관점이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 간 대화를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의 주된 전략은 집단의 구성원들 간 대화와 집단적 결정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노정한다.

V. 결론: 정치적 올바름은 얼마나 올바른가

정치적 올바름은 일상의 언어, 태도, 관습, 행동 등에 사회집단간 권력관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교정하여 사회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행동주의적 신념이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 호칭, 남성이 여성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관습, 대학의 커리큘럼, 문화 컨텐츠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변화를 촉구하는 정치적 올바름은 그동안 많은 실천적 변화들을 만들어 냈지만 동시에 반발과 백래시를 불러오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며 정치적 올바름이 과연 얼마나 올바른지 살펴보고자 했다.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제기는 사회집단간 경험과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토대로 함께 논의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정의의 대상을 확장시키는 아이리스 영의 사회정의관을 바탕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영의 이론을 토대로 정치적 올바름의 실천들을 정당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먼저, 정치적 올바름의 공격적인 전략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하는 약자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치적 올바름을 완전히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정치적 올바름이 집단 간 억압과 지배를 이야기하고, 이를 변화시켜 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집단간의 대화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정치적 올바름은 억압적인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는 개인들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도덕주의적인 의무론에 기초해 개인들에게 죄책감을 유발하고 반대자들에게 쉽게 낙인을 찍는다. 동시에, 정치적 올바름은 사회구조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언어생활, 태도, 관습을 개인의 윤리성 문제로 환원시키는데, 이는 노동계급을 쉽게 차별주의자로 비난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단호하고 공격적인 태도는 정치적 올바름이 많은 성취를 거둔 원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회 집단 간 긴장을 고조하고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우리가 사회를 더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데에는 사회집단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영의 주장, 그리고 권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든 올바름의 편에 서서 개별 전투에서 승리하겠다는 전위정당적인 PC의 전략이 아니라 다수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투쟁의 전체 지형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이 더 적절하다는 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정치적 올바름은 집단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반발을 야기하며, PC의 대의에 동의하는 많은 이들에게서도 비판 혹은 미지근한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올바름이 파기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정치적 올바름은 일상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고 일련의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나름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는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이야기하며 대화를 통해 도덕적 판단에 도달할 수 있는 관행과 제도가 미비한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대의제가 소수자들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제일 큰 문제는 정치적 올바름이 과연 얼마나 올바른지가 아니라, 정치적 올바름을 사회정의를 추동하는 여러 전략 중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유일한 전략으로 만들고 있는 제도화된 정치의 실패이다. 공론장을 만드는 노력을 하는 대신, 소수자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들을 고민하는 대신, 제도화된 정치는 SNS정치에 과몰입하며 PC의 공격적인 전술을 모방하고, PC가 부추기는 사회집단간 대립에 편승하며 제도화된 정치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흑인 인어공주와 레즈비언 게임 주인공을 둘러싼 문화 논쟁은 활발하나, 이들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제도적으로 인정과 권리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과 같은 정책들에 대한 공중과 대표자의 대화는 없는 이상한 정치를 목도하고 있다.

정치적 올바름은 나름의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지니는 실천이고, 이것의 문제의식이 일상의 변화를 벗어나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도화된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논의 이상으로, 제도 내에서 사회집단들의 다양한 경험과 관점의 충돌을 다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것이다.

참고문헌

강준만. "'정치적 올바름'의 소통을 위하여:'자유· 위선· 계급'의 3 대 쟁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7, no. 2 (2018): 227-257.

김성윤. "게임과 정치적 올바름 문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사례." *오늘의 문예비평* (2021): 114-128.

김주선. "[소설] 모든 문학과 모든 정치를 위해-최근 문학과 정치 (페미니즘) 논쟁에 부쳐." *문학들* 52 (2018): 324-337.

앨런 블룸. *미국 정신의 종말*. 고양: 범양사, 2018.

문형준. "정치적 올바름과 살균된 문화." *비교문학* 73 (2017): 103-128.

이윤복. "'정치적 올바름'논쟁에 관한 비판적 고찰." *철학논총* 110 (2022): 75-98.

이종일. "정치적 올바름의 개념과 논쟁 범위 고찰." *사회과교육연구* 23, no. 2 (2016): 1-18.

_____. *정치적 올바름 논쟁과 시민성*. 파주: 교육과학사, 2019.

조던 피터슨, 스피븐 프라이, 마이클 에릭 다이슨, 미셸 골드버그. 조은경 역. *정치적 올바름에 대하여*. 파주: 프시케의 숲, 2018.

한송희, 이효민. "영화와 '정치적 올바름'에 관한 논쟁:<캡틴 마블>과 <어벤져스: 엔드게임>, < 인어공주> 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8, no. 2 (2020): 5-71.

한송희. "한국 문학장에서 '정치적 올바름'은 어떻게 상상되고 있는가?:<82 년생 김지영> 논쟁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6, no. 2 (2021): 49-93.

홍진석. "'정치적 올바름'과 문학의 역할-[현남 오빠에게]의 기획과 현상적 징후." *인문과학연구* 42 (2018): 143-158.

Deresiewicz, William. "On political correctness." *The American Scholar* 86, no. 2 (2017): 30-42.

Hall, Stuart. Some 'politically incorrect' pathways through pc. In S. Dunant (ed.) *The War of the Words: The political correctness debate*. pp.164-184. London: Virago Press, 1994.

Hughes, Geoffrey. *Political correctness: A history of semantics and culture*. John Wiley & Sons, 2011.

Moller, Dan. "Dilemmas of political correctness." *Journal of Practical Ethics* 4, no. 1 (2016): 1-22.

Young, Iris Marion.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